

2016년 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개소기념 심포지움

『행복한 안전충남』 비전의 전망과 과제

- ◆ 일 시 : 2016년 9월 21일 10:00 ~ 18:00
- ◆ 장 소 : 리솜스파캐슬 덕산(테마동 2F 제라늄홀)
- ◆ 주 최 :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 ◆ 주 관 : 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모시는 말씀

안녕하십니까?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으로 기억될 것 같은 여름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 곧 결실의 계절인 가을로 접어들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속에서 도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의 재난 안전 관리 정책 전반에 걸친 연구기능을 담당하고자 지난 6월 10일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가 그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현재 충남은 중장기적 비전과 목표를 통해 도민 안전에 관한 체계의 정립이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안전은 도민행복의 가장 기본적 요소라는 인식하에 도민과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안전에 대한 지향점을 설정하고자 『안전충남비전』수립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워크숍, 도민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조사 등을 통하여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비전을 만들고가 노력해 왔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행복한 안전 충남』비전의 전망과 과제에 관한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부디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저희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가 보다 내실있고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격려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장 박 근 오

2016 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개소기념 심포지움

행복한 안전충남 비전의 전망과 과제

♣ 심포지움 일정

- ◆ 일 시 : 2016년 9월 21일 10:00 ~ 18:00
- ◆ 장 소 : 리솜스파캐슬 덕산(테마동 2F 제라늄홀)
- ◆ 주 최 :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 ◆ 주 관 : 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 등록 및 접수: 2016년 9월 21일(수) 10:00 ~ 10:30

♣ 개회 및 초청특강 : 10:30 ~ 12:00

▷ 사 회 : 박근오(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장)

▷ 개회사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 초청특강

Robert Wade Duggleby, Jr. (Emergency Management and Homeland Security Program,
Florida State University)

“Global Security Threats and Challenges”

◆ 오찬 12:00 ~ 13:00

제1회의 13:30 ~ 15:00

사회: 김영수(신성대학교)

발표: 김겸훈(한남대학교)

“참여와 협력의 안전거버넌스”

배동철(호서대학교)

“지속가능한 안전생활터”

김근영(강남대학교)

“신뢰와 소통의 안전시스템”

토론: 유재룡(충청남도 안전정책과장)

이상진(충남연구원 연구실장)

이창길(인천대학교)

◆ 휴 식 : 15:00 ~ 15:20

제2회의 15:20 ~ 16:20

사회: 김윤희(목원대학교)

발표: 조민상(백석대학교)

“높은 인식과 실천의 안전문화”

양기근(원광대학교)

“함께 누리는 안전복지”

토론: 이동규(동아대학교)

최홍영(국민안전처 119생활안전계장)

◆ 휴 식 : 16:20 ~ 16:40

제3회의 16:40 ~ 17:40

라운드테이블 : 행복한 안전충남 비전의 전망과 과제

사회: 이재은(충북대학교, 안전충남비전위원장)

패널: 전병욱(충청남도 재난안전실장)

김광용(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장)

류진하(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장)

허재영(대전대학교)

김윤희(목원대학교)

박근오(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장)

♣ 폐회식 17:40 ~ 18:00

목 차

◆ 국제적 안보위협과 과제	
Professor, Robert Wade Duggleby, Jr.(Florida State University)	1
◆ 참여와 협력의 안전지킴이	
김겸훈 교수(한남대학교)	13
◆ 『행복한 안전 충남』비전의 전망과 과제-지속 가능한 안전 생활터	
배동철 교수(호서대학교)	23
◆ 신뢰와 소통의 안전시스템	
김근영(강남대학교)	35
◆ 높은 인식과 실천의 안전문화	
조민상(백석대학교)	47
◆ 함께 누리는 안전복지	
양기근 교수(원광대학교)·정원희 교수(건양대학교)	63

국제적 안보위협과 과제

Professor, Robert Wade Duggleby, Jr.
(Emergency Management and Homeland Security Program,
Florida State University)

국제적 안보위협과 과제

Professor Duggleby (더글비 교수)



전략상 국제 환경

- ▣ 위협의 원인 및 공격과 참사 유형에 대한 수 많은 불확실성
- ▣ 오판과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의 증가
- ▣ 테러리스트, 비국가활동세력 (non-state actors)들의 폭력성과 힘의 확산
- ▣ 파멸적인 테러의 증가: 대량살상 및 파괴 무기를 통한 공격 가능성
- ▣ 방어, 제지, 억지 시설의 감소

위협과 위험

- 자유사회는 본질적으로 위험에 처해 있다; 자신의 힘이 자신을 해칠 수 있다.
- 복잡하고 복합적인 재앙 - New Normal (뉴 노멀: 새로운 정상)
- 십년내에 화학, 생물학, 방사능, 핵 및 고폭탄 공격의 가능성이 높음
- 공격과 재앙의 2, 3차의 영향으로 인하여, 예측과 계획수립에 난항을 겪는다.
- 100% 방어는 가능하지 않다. - 그러나 필수적이다!

위협이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안보방안이 정당화 되는가? 우리는 어떤
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선견조약

- 1985년 6월 14일, 룩셈부르크의 세계에서 체결되어 1995년에 최종적으로 전면 시행
- 사람과 열차, 트럭과 같이 움직이는 것에 대한 자유로운 이동이 허락됨
- 가입국에 대해서 국경에서 여권이나 비자 확인이 불필요
-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민사태로 인하여 강력한 성밀 검사가 시행 중
 - 프른텍스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 인력과 장비 부족
 - EU 회원국은 임시국경감독을 연장할 것을 제안(오스트리아와 독일) -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독일에서 거주를 원함.



국제 안보 문제의 측면

- ▣ 2,500 - 7,500 마일의 국경
- ▣ 9,000 - 55,000 마일의 해안
- ▣ 400 - 450개의 국제 공항
- ▣ 매년 5억명에 달하는 미국 입국자들
- ▣ 87,000 개의 미국내 정부 기관
- ▣ 750,000 - 2백만명에 달하는 경찰관들
- ▣ 매년 1600만개의 선적 컨테이너가 미국에 들어오고 나감

테러리즘 측면에서 미국

- 단일국가
- 9/11이전에 국내테러가 거의 없음
- **파멸적인** 테러리즘에 대한 걱정
- 전국가적인 안보의 모든 수단을 부담
- **능력에 근거한 접근**; 위협이 일어나기를 기다리지 않음
- **중요성과 취약성에** 근거한 위협의 평가
- 취약한 부분의 감소
- 공세의 활동: 국방은 완벽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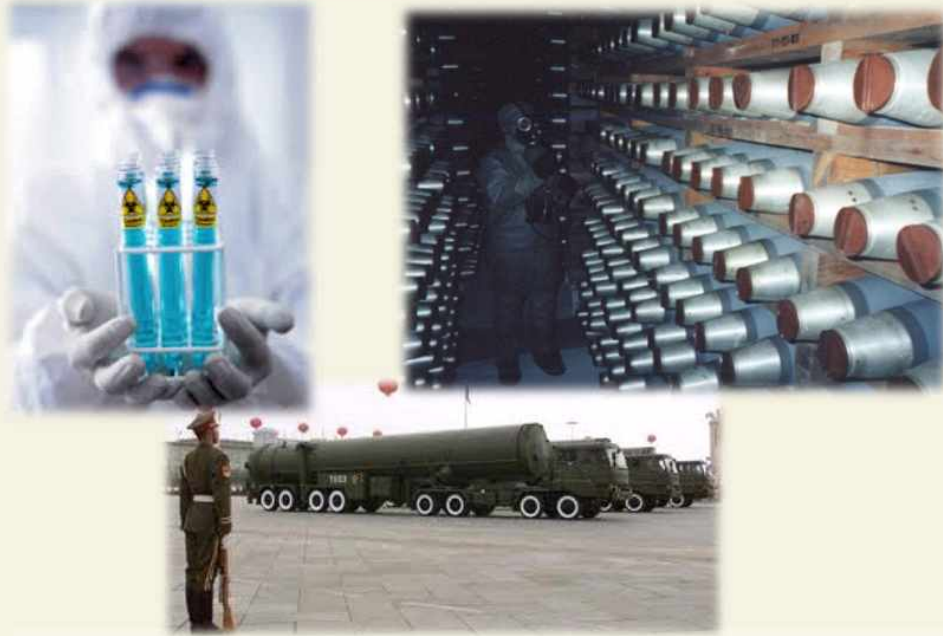
내가 생각하는 6가지 국제 안보 위협

- 화학, 생물학, 방사능, 핵 및 고폭탄 (CBRNE)을 사용한 파멸적인 테러리스트 공격
- 대량 파괴 무기(WMD)의 확산
- 아이시스 (ISIS) 의 발흥과 지역적인 불안정성
-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 초국가적 조직범죄
- 복합적이고 파국적인 재해 (일본의 3/11)

파멸적 테러리즘



대량 파괴 무기(WMD)의 확산



“이른바” 이슬람국가 (아이시스)





사이버 공격



초국가적 조직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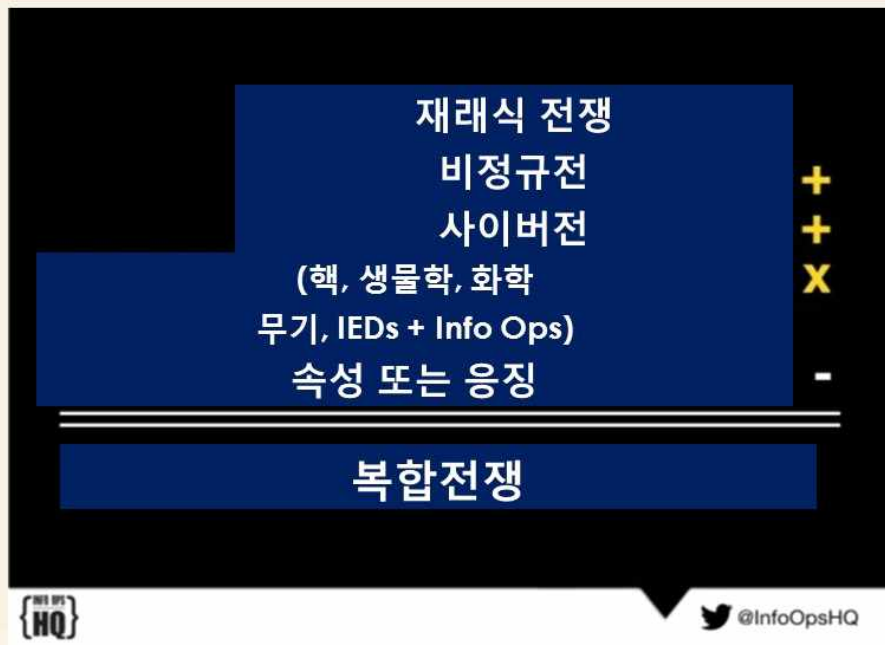
복합적 재해



다른 위협들

- 광범위한 유행병
- 에너지 사용의 무기화
- 핵발전소 사고
- 복합전쟁(Hybrid Warfare) 의 부상
- 극단적인 지하디스트(jihadists)의 시리아 난민에 침투

복합전쟁



결론

- 파멸적인 대량파괴무기 반대
- 테러리스트의 공격 예방과 협력
- 자유라는 가치에 대한 지불 - 보통
- 정보/지식 공유가 필수적
- 미국과 세계의 다른나라간 위협에 대한 인식 공유를 발전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 수많은 국제적인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국제적인 전략을 발전시켜야



참여와 협력의 안전지킴이

김겸훈 교수
(한남대학교)

참여와 협력의 안전지킴이

2016. 9. 21(수)

김 겠 훈

한남대학교



왜, 안전
지킴이
인가?

어떻게
작동 시킬
것인가?

달성해야
할 핵심
과제들



왜, 안전 지킴이(가칭) 인가?



역할이 바뀌었다

1. 충청남도의 역할 : Government → Governnance
2. 자치행정의 주권자인 주민의 역할 : 주민은 행정서비스의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PROSUMER(생산자+소비자)→ 안전과 같은 공공재에서는 더욱 그 역할이 중요해 짐
3.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거버넌스의 개념을 단순히 지방 자치단체의 역할 축소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확대하고자 함



도정에 나타난 거버넌스의 모습

■ 충청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서 나타난 거버넌스의 모습

1. 도민 도정참여 활성화를 통한 민관협치체계 구축
2. 충남형 자치공동체 육성
3. 협업거버넌스형 지역개발사업

■ 시사점

- 도(지자체), 공무원, 현장전문가, 시민사회(지역활동가), 사업시행자, 공공기관, 연구원 등이 중심
- 주민자치위+기존직능단체간의 협치 모습의 형태로 나타남
- 이는 여러 세력들과 ‘더불어 다스린다’ 는 거버넌스의 의미에는 충족하지만 참여의 생활화와 성숙한 참여문화에서 발현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우리가 구상하는 거버넌스

- 역내 자원활용의 효율화와 극대화
- 역내 사회적 역량의 결집과 표출
- 각 주체들의 적절한 역할 분담
- 문제에 대해 가장 잘 아는 당사자로서의 주민에게 역할 부여

즉 단순히 공공부분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서 참여자의 책임성과 파트너십 및 자율성을 근간으로 협력하는 협의체



안전거버넌스를 대신 할 만한 어휘들

순우리말	뜻	적용사례
지킴이	- 지키다+키우다의 합성어 - 지키는 수동성과 키우는 능동성 - 참여와 협력을 함유	안전지킴이
빛뜨란	- 빛이 비친 뜰	안전빛뜨란
가다기	- ‘가득히’의 다른 표현	안전가다기
누리보듬	- 누리+보듬다의 합성어 - 온세상을 한 껏 보듬고 살아가는 모습	안전누리보듬
울타리	- 담 대신에 풀이나 나무 따위를 얹어서 집을 둘러막거나 경계를 구분하는 물건	안전울타리
한	- 큰	안전 한울타리
도담	- 건강하게 자라라는 뜻 - 어린아이가 아무 탈없이 잘 자라는 모양	안전도담도담
세움	- 뜻을 똑바로 자리잡게 함	안전세움갈무리
갈무리	- (물건을) 잘 정돈하여 간수함	



안전거버넌스를 “안전지킴이” 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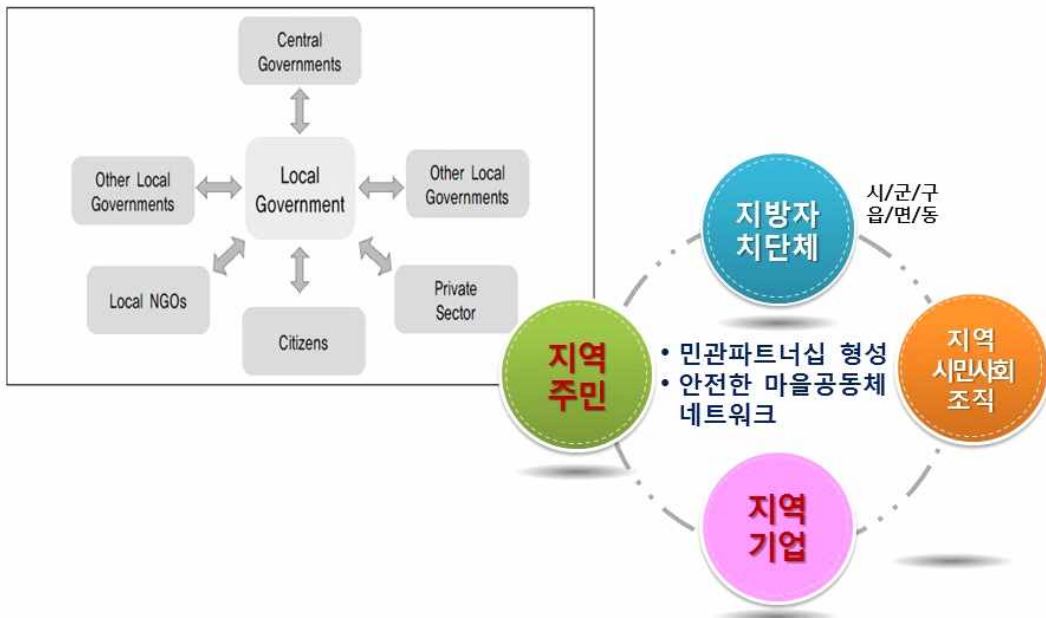
- 안전을 지키는 일은 지역을 잘 아는 **주민의 참여로**
- 안전을 키우는 일은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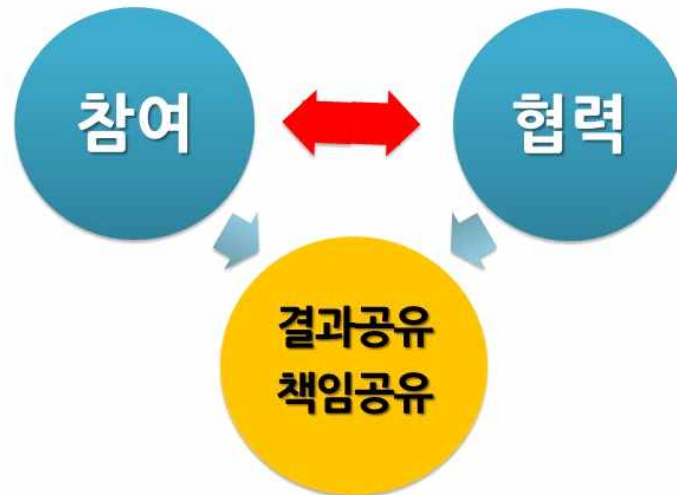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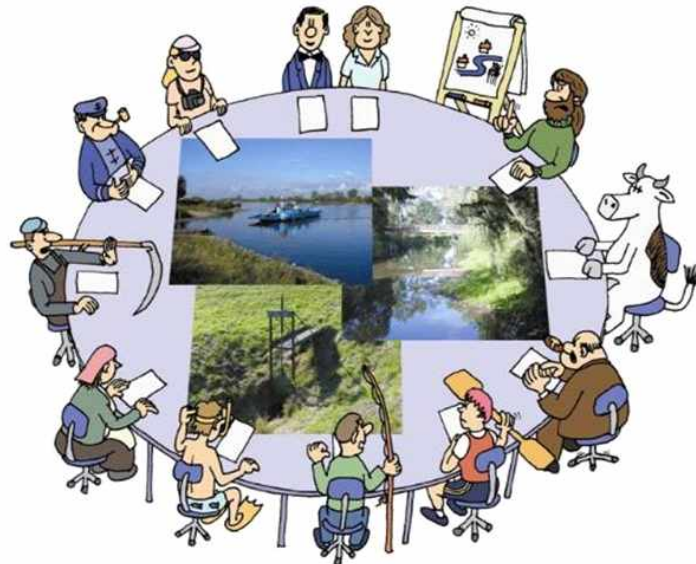
“안전지킴이”의 주요 행위자들



“안전지킴이”의 작동원리



“안전지킴이”의 참여와 협력 모습



“안전지킴이” 가 지켜야 할 핵심가치들



지속가능한 “안전지킴이” 의 조건

- 관은 컨트롤타워 역할에 대한 생각을 극복해야 한다
- 참여가 자유롭고 보람되어야 한다
- 모든 참여자에게 역할을 주고 소속감을 고취한다
-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 수요와 요구에 대응성과 민감성을 갖추어야 한다
- 모든 결정은 참여자간 합의를 지향적이어야 한다
- 그 혜택은 모두에게 형평하고 모두를 포섭해야 한다
- 분명한 원칙과 룰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엄격히 적용하며 결과를 피드백한다



**달성해야 할
핵심 과제들**



감사합니다.



『행복한 안전 충남』비전의 전망과 과제

지속 가능한 안전 생활터

배동철 교수

(호서대학교)



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개소기념 심포지움

『행복한 안전 충남』 비전의 전망과 과제

지속 가능한 안전 생활터

2016. 9. 21



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호서대학교
HOSEO UNIVERSITY

발표 순서

- 안전충남비전 추진 경과
- 안전생활터의 범위
- 안전생활터의 구성
- 예시



안전충남비전의 기본이념



- 생명가치 존중의 사회
- 모든 사람이 행복한 안전
- 행복도민의 밑거름



- 서로 신뢰하는 사회
- 모두가 참여하는 안전
- 참여와 협력
- 다함께 만드는 안전한 사회



- 함께 누리는 안전한 사회
- 차별없는 모두의 안전
- 안전취약계층의 배려



행복한 안전충남!

다 함께 만들고 모두가 누립니다.

기본이념

- 사람 존중
- 더불어 함께
- 누리는 안전

생명가치 존중의
안전문화

신뢰와 소통의
안전시스템

함께 누리는
안전복지



지속가능한
안전생활터

참여와 협력의
안전거버넌스




1 안전충남비전 추진 경과

3. 세부 목표(안)

 생명가치 존중의 안전문화	 지속가능한 안전생활터	 신뢰와소통의 안전시스템	 참여와협력의 안전거버넌스	 함께 누리는 안전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사고 저감 ·안전의식 제고 ·안전문화 확산 ·자율안전문화 고취 ·교육 활성화 및 훈련의 실효성 제고 ·전문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프라 확충/개선 ·생활속 위험/위협 요소 ·정보공개 ·재해분석/재난 안전지도 ·복원력/회복력/지속력 강화 ·리스크의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안전 관리 체계 개선 ·시스템 구축 ·현장대응 강화 ·선제적 대비태세 강화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매뉴얼 개선 및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참여/시민참여 ·공동체 육성 ·자율적 대응방안 ·거버넌스 ·지역사회의 주도적 활동 ·안전공동체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맞춤형 안전복지 실현 ·안전복지 사각 지대 배제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차별없는 모두의 안전 ·참여하는 안전문화



2 안전생활터의 범위



**지속 가능한
안전 생활터**

- 인프라 확충/개선
- 생활속 위험/위협요소
- 정보공개
- 재해분석/재난안전지도
- 복원력/회복력/지속력 강화
- 리스크의 최소화

➤ 시간적 범위

- 안전충남비전 로드맵

➤ 공간적 범위

- 충청남도

➤ 내용적 범위

- 안전생활터의 개념 수립
- 인프라에 대한 수요와 타당성 검토
- 각 시군별 재해/재난특성 분석
- 선택과 집중
- 선제적 예방 vs 사후 대응
- 최소화 또는 국소화 방안 검토



3 안전생활터의 구성

1. 현황

- 주요 5대 범죄 검거율 : 61.6%
- 범죄는 감소하나 교통사고와 화재는 증가
-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는 의견 증가 추세
-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평가 : 5.63점
- 식품생산 불신단계 : 53.4% (제조가공 단계)
- 소방 안전 관련 : 사고현장 도착시간 단축
-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 5.70점
-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응급의료서비스 구축에 대한 요구가 높음

* 출처 : 2015 충남사회지표



3 안전생활터의 구성

1. 현황

지역안전지수 공개현황

공개결과 : 4등급 3개 / 3등급 4개 ⇨ 전반적으로 부진

구 분	화 재	교 통	자연 재해	범 죄	안전 사고	자 살	감염병
등 급	4	4	3	3	3	4	3
평 점	72.8	66.1	63.3	79.1	81.1	72.3	68.3
전국평균	76.7	76.4	63.5	76.7	78.9	75.6	74.3
최고/최저	경기/전남	경기/전남	전북/전남	전남/제주	경기/제주	경기/강원	경기/전남

* 출처 : 국민안전처 2015년 11월 전면 공개(2014년 통계 기준)



3 안전생활터의 구성

2. 활동계획

- 노인 안전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 대화와 소통을 통한『안전충남비전』실천과제
- 안전의식 향상 운동
- 신속한 상황관리·전파로 효율적 재난대응능력 강화
- 민관 협력적 안전관리 체계 네트워크 구축
- SNS를 통한 재난정보공유 체계 구축 및 규칙 제정
- 충남형 재난대비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 시설물 안전점검 교육 확대
- 재난안전 전문교육 이수 의무화
- 지진대응능력 향상 위한 지진성능평가



* 출처 : 2017 충청남도 시책구상(재난안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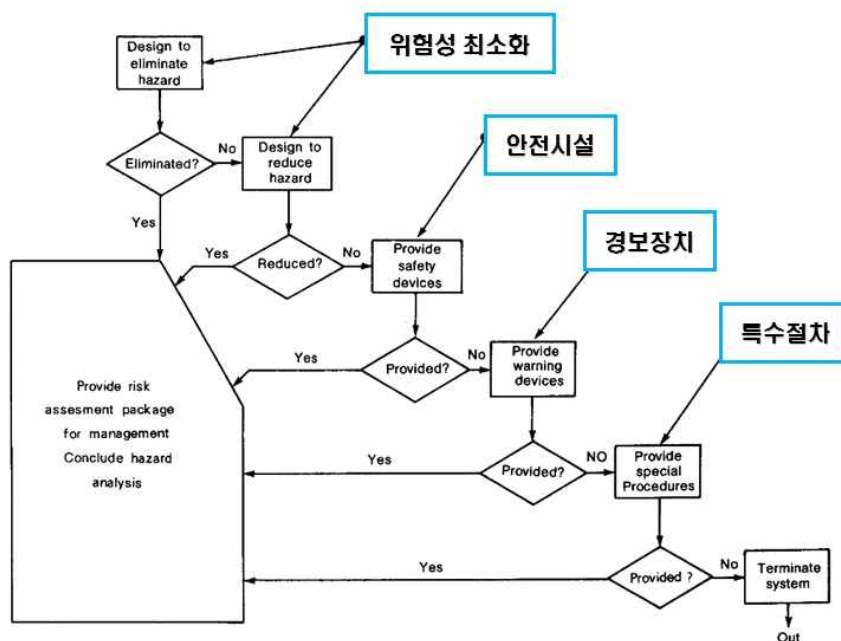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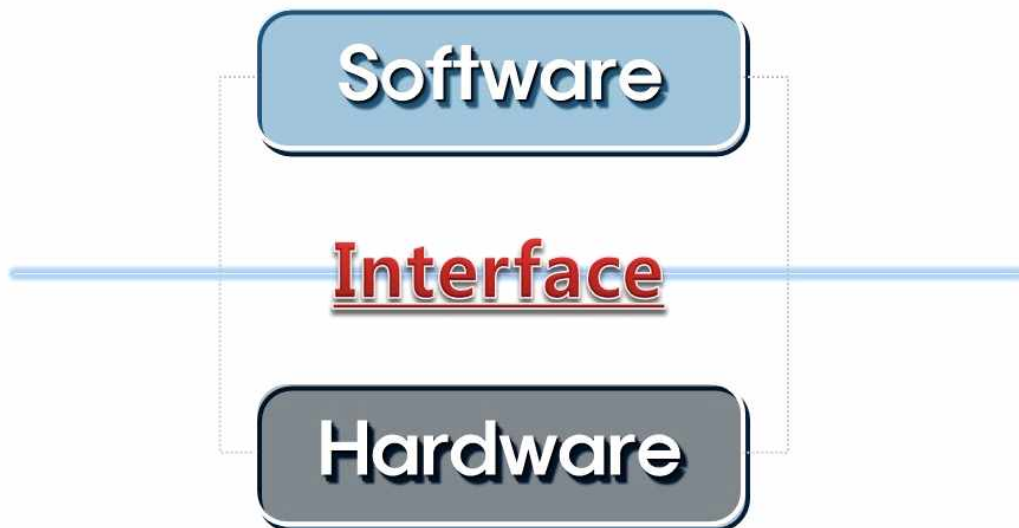
3 안전생활터의 구성

2. 활동계획

- 「자율적 화재 대응시스템」구축
- 대형·특수재난 긴급구조 대응역량 강화
- 119종합방재센터 재난상황관리 기능 강화
-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대응시스템 개발
- 특수재난 및 수상인명구조 전문인력 양성
- 안전교육 확산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 병원 전 단계 119응급의료체계 개선
- 다목적소방헬기를 활용 입체적 재난대응



* 출처 : 2017 충청남도 시책구상(소방본부)



3 안전생활터의 구성

4. 구성 방안

Software

- 관련 법규 및 제 규정
- 관련 통계 및 조사 규정
- 유관 부서별 업무분장
- 유관 부서간 책임과 권한
- 재난/재해 지도 관리
- 위기상황별 매뉴얼 작성
 - 초기단계
 - 진압단계
 - 사후 관리단계 구분 필요

Interface = Service

Hardware

- 조직 및 인력
- 각종 인프라 시설 구축
- 추가/확충 지원
- 위기상황 발생시 초기 대응 시스템 구축
- 위기상황별 예방체계, 조기발견, 피해 국소화, 사후관리, 개선에 이르는 환류 체계 구축



4 예시

- 소방 안전 관련하여 사고현장 도착시간 단축이 1순위

Step 1 : Hardware 분석

- 각 시군별 소방관서 설치 현황과 시설보유 현황 조사
- 소방관서별 담당 구역 및 평균 출동시간 조사
- 시간대별 골든타임 도착율 조사



4 예시

- 소방 안전 관련하여 사고현장 도착시간 단축이 1순위

Step 2 : Software 분석

- 대형 화재, 재난 시 인접 소방관서와의 책임과 역할 규정 조사
- 화재 통계와 연계하여 업무부하 또는 공백 검토
- 개선 결과에 대한 환류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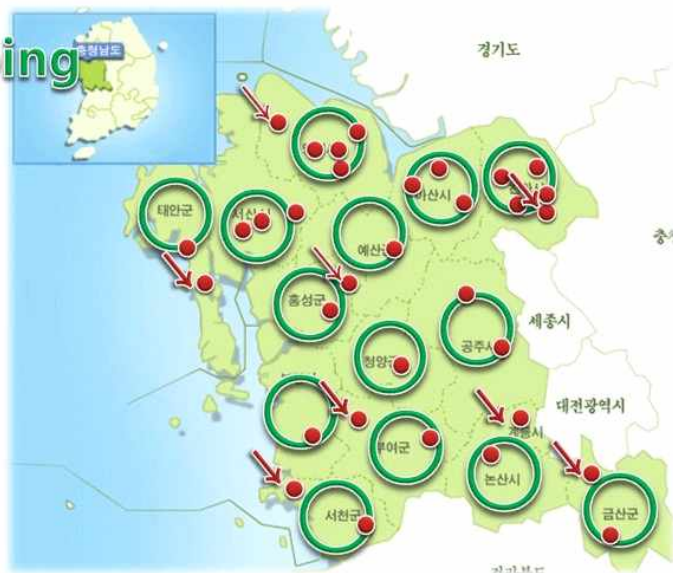


4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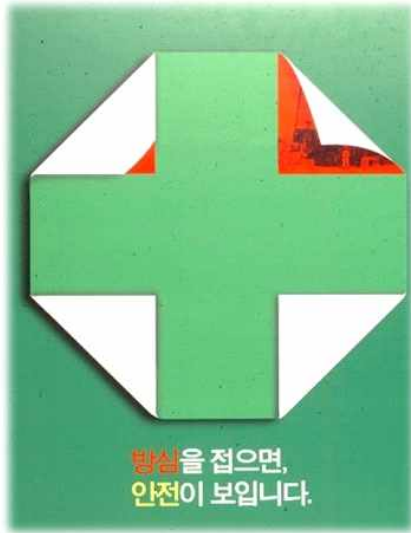
- 소방 안전 관련하여 사고현장 도착시간 단축이 1순위

Step 3 : Mapping

- 화재통계 기록
- 소방관서 골든타임 출동 가능구역 표기
- ➡ 공백지역 화재통계 확인
- ➡ 중첩지역 화재통계 확인
- 담당구역 조정 또는 소방관서 신설 추진



Q & A



신뢰와 소통의 안전시스템

김근영 교수
(강남대학교)

2016년 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개소기념 심포지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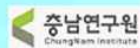
『행복한 안전 충남』비전의 전망과 과제 -목표 3: 신뢰와 소통의 안전시스템-

2016. 9. 21

발표자 : 김근영교수(강남대)



주최 :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주관 : 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INDEX

1 「신뢰와 소통의 안전시스템」부문 현황 및 개선방향

2 「신뢰와 소통의 안전시스템」부문 세부추진전략

1. 「신뢰와 소통의 안전시스템」부문 현황 및 개선방향

1. 현황 및 개선방향

2. SWOT분석



1. 현황 및 개선방향

■ 신뢰와 소통의 안전시스템 부문



2. SWOT분석

신뢰와 소통의 안전시스템 SWOT분석

강점(S)

- 도지사의 높은 재난안전 혁신 관심도
- 안전충남비전위원회를 통한 민간-도청간 혁신 소통의 장 마련
- 우리나라 GRDP성장률 1위의 경제성장 잠재력 보유
- 안전관리계획, 중수해저감종합계획 등 재난안전 관련계획의 수차례 수립경험 존재
- 충남도 공무원교육원, 충남연구원 등 교육연구단지 조성

약점(W)

- 도시지역, 해안지역, 산간지역이 고르게 분포해 다양한 재난유형 발생
- 주거지형과 산업지형 재난안전사고가 다양하게 발생
- 공무원 순환보직으로 재난안전분야 전문성 미흡 및 전문인력 확보 부족
- 중앙정부의 재난안전관리체계 개선 노력이 실제 재난현장에 접목되는데 시일 필요
- 빈번한 시스템/계획 개선으로 이해도 미흡

기회(O)

- 안전충남 비전 실현을 통한 혁신기회 마련
- 국민안전처 출범으로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 분위기 조성
- 법령에 의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마련으로 재난안전 사업 추진 동력 확보가 가능
- 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개소로 도내 재난안전연구 허브 구축(광역지자체 최초)
- 최근 세월호 사태, 메르스 사태, 산업단지 사고, 지진 등으로 재난안전 관심도 증가

위협(T)

- 기후변화로 중수해, 대설, 가뭄 등 기후변화 재난 위험도 증가
- 도시지역 인구/산업증가로 재난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증가
- 농촌지역 인구 고령화로 재난대응력 약화
- 외국인 거주인구 증가로 새로운 재난안전 사고 위험요인 발생
- 타 부문에 비해 열악한 예산 배정 및 지원체계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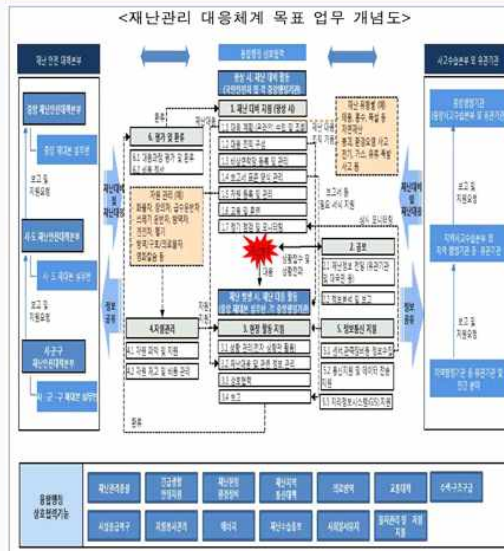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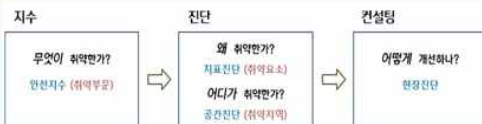
2. 「신뢰와 소통의 안전시스템」부문 세부추진전략

1. 4대 전략과제 개요
2. 전략과제 1 : 충남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 관리역량 강화
3. 전략과제 2 : 『안전충남비전』 실현을 위한 재난안전 관련계획 실행력 확보
4. 전략과제 3 : 신속한 대응을 위한 충남형 재난안전 상황관리시스템 정비
5. 전략과제 4 : 충남형 재난대비 교육훈련시스템과 대응자원 관리시스템 구축

2. 전략과제 1 : 충남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 관리역량 강화

필요성 및 목적

- 충남도 기초자치단체별로 지역 안전진단을 통한 재난안전 관리역량을 향상



9

2. 전략과제 1 : 충남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관리역량 강화

추진사업 1

- 충남도 재난관리책임기관별 재난안전관련 행정부서 업무 진단 및 관리역량 평가
 - 도청 · 기초지자체 · 지방행정기관 · 공공기관 · 공공단체 · 재난관리 대상 중요시설 관리기관 등

추진사업 2

- 안전충남 실현을 위한 안전진단 역량 강화 및 지역안전지수 개선 전략 수립

추진사업 3

- 재난안전연구 지원, 방재시설 정비, 재난보험제도 확대 등 재난예방 기반 구축

추진사업 4

- 재난대응 기능별 필수 협업체계 구축 및 재난대응 소통을 위한 공보체계 개선

추진사업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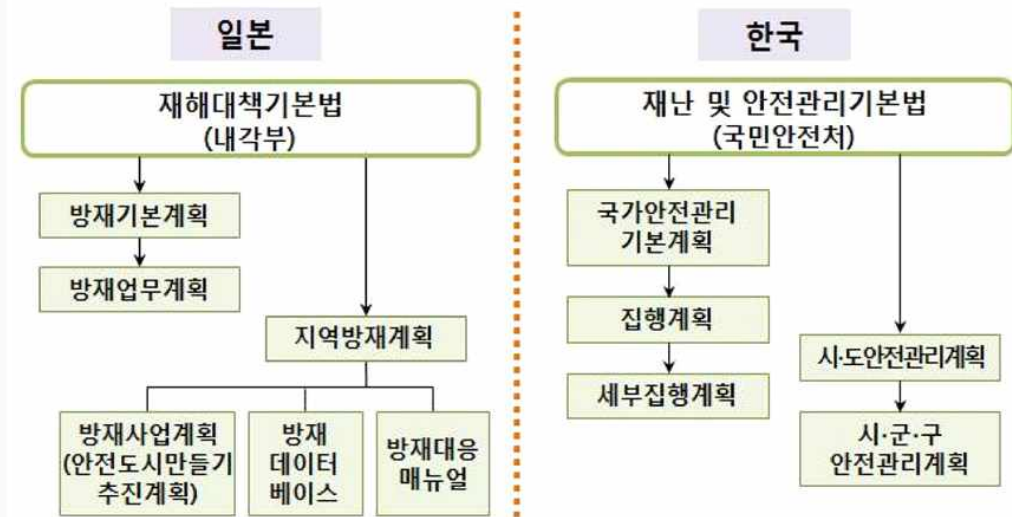
- 충남도 재난안전 재정력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예산 총괄관리체계 구축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확보 방안 마련

10

3. 전략과제 2 : 『안전충남비전』 실현을 위한 재난안전관련계획 실행력 확보

필요성 및 목적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위기관리매뉴얼, 안전도시 마스터플랜 등 각종 계획의 수립 및 실행력 강화



11

3. 전략과제 2 : 『안전충남비전』 실현을 위한 재난안전관련계획 실행력 확보

필요성 및 목적



12

3. 전략과제 2 : 『안전충남비전』 실현을 위한 재난안전관련계획 실행력 확보

추진사업 1

- (가칭) 충남도 『안전충남 비전』 전략계획 및 기초지자체 안전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충남도 재난 안전 개선 중장기방안 마련(보령시 등)

추진사업 2

-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및 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을 통한 풍수해 재난관리 강화

추진사업 3

- 풍수해 외 자연재난 대상 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사각지대 재난유형 위험 관리
- (가칭) 기초지자체 도로제설 작업계획 수립, 폭염대응계획, 지진대응계획, 비상대처계획 정비 등

추진사업 4

- 충남도 재난관리책임기관 위기관리 매뉴얼 실효성 확보 및 관리체계 개선

추진사업 5

- 사회재난 복구체계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충남도 사회재난 복구 실무계획 표준안 마련

13

4. 전략과제 3 : 신속한 대응을 위한 충남형 재난안전 상황관리시스템 정비

필요성 및 목적

- 충남도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충남형 재난대응 표준모델' 개발



14

4. 전략과제 3 : 신속한 대응을 위한 충남형 재난안전 상황관리시스템 정비

추진사업 1

- 충남도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충남형 재난대응 표준모델' 개발

추진사업 2

- 충남도 시·군 재난안전 상황실 정비 및 운영 개선(계룡시, 예산시, 서천시 등)

추진사업 3

- 재난정보의 신속한 수집·판단·전파를 위한 통합재난안전시스템(플랫폼) 구축(충남도 사업)

추진사업 4

- 충남도와 시·군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연계 및 예·경보시스템 설치사업 추진

추진사업 5

- 모든 재난상황의 실시간 감시를 위한 충남형 『스마트 빅보드』 구축(충남도 사업)

15

5. 전략과제 4 : 충남형 재난대비 교육훈련시스템과 대응자원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 및 목적

- 충남형 재난대비 교육훈련시스템 구축으로 재난대응 전문성 확보 및 재난 대비태세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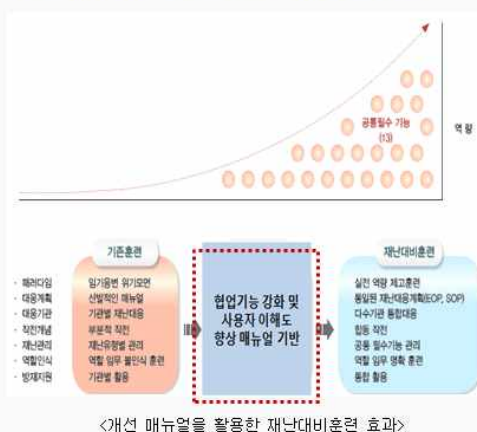
재난대비 훈련의 의의



재난대비 훈련의 필요성

사고지휘체계, 응원조정체계, 공공정보, 정보통신, 방재자원 지원 등 공통협력분야에 대한 상호협력체계가 전체적인 재난관리 체계 아래 움직이도록 평소부터 교육과 훈련이 필요

협업기능이 강화되고 사용자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매뉴얼을 통해 재난대비훈련을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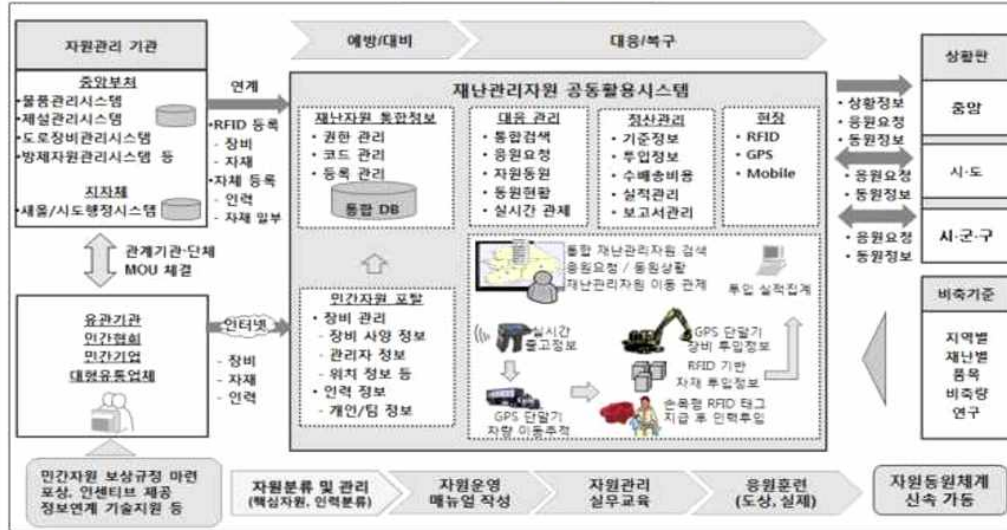
16

5. 전략과제 4 : 충남형 재난대비 교육훈련시스템과 대응자원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 및 목적

- 충남형 재난대응 동원자원 통합관리체계 및 공동활용시스템 구축을 통한 재난대응 자원활용 효율화

자원 통합관리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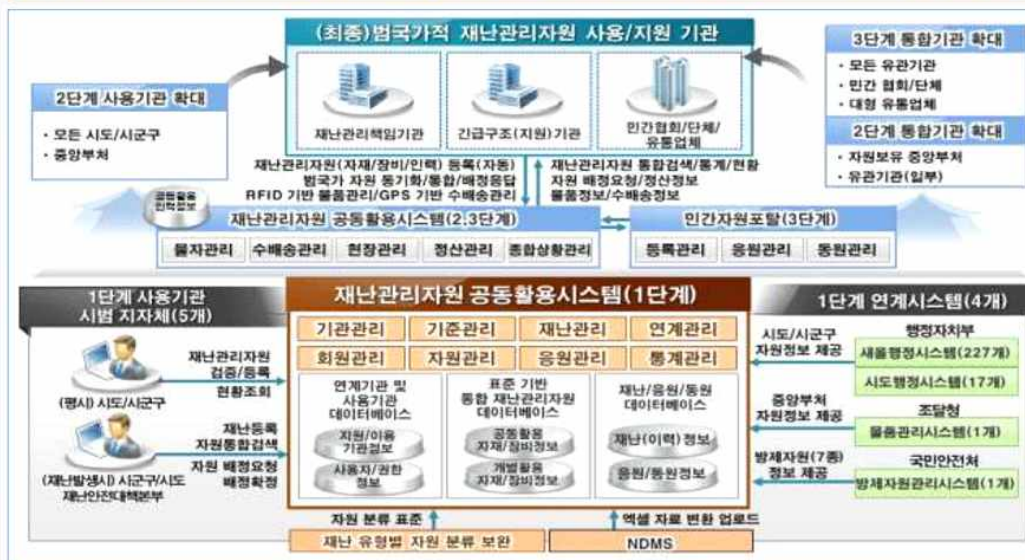


17

5. 전략과제 4 : 충남형 재난대비 교육훈련시스템과 대응자원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 및 목적

- 충남형 재난대응 동원자원 통합관리체계 및 공동활용시스템 구축을 통한 재난대응 자원활용 효율화



18

5. 전략과제 4: 충남형 재난대비 교육훈련시스템과 대응자원 관리시스템 구축

추진사업 1

- 충남도 공무원교육원 재난안전교육체계 강화 및 중앙정부 교육프로그램 연계방안 마련

추진사업 2

- 충남도에 특화된 재난안전 시나리오 기반 훈련설계 및 평가지침 마련

추진사업 3

- 재난대응 상황정보 전파체계 개선 및 재난소통 공보 전문훈련 과정 운영

추진사업 4

- 충남형 재난대응 동원자원 통합관리체계 및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추진사업 5

- 충남도 재난유형별 전문가 지원시스템 및 민간 자원봉사자 관리시스템 구축

19

감사합니다



높은 인식과 실천의 안전문화

조민상 교수
(백석대학교)

높은 인식과 실천의 안전문화

백석대학교 법행정경찰학부

조민상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안전문화의 의의
- III. 안전문화의 현재
- IV. 안전문화 향상을 위한 제언
- V. 맺는 말

I. 들어가는 말

- 전통적 재난으로 인식되던 자연재해 및 사회적 재난도 다양화, 다각화되고 있으며 생활 속의 모든 위험 등도 안전관리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안전관리의 방식도 상황관리 중심, 사후 대응 위주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초동대응 및 상시 안전관리 체계, 민관 협업을 통한 선제적·예방적, 근원적 차단 등 다양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됨
- 안전과 관련되는 사회 전반의 인식 향상과 자율을 기반으로 한 실천적인 안전문화가 정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국민 스스로 일상 속에서 안전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실천을 통한 안전활동 및 안전문화의 확산이 더욱 필요함

II. 안전문화의 의의

1. 안전문화의 개념

- 안전 문화는 문화의 하위체계로서 명확하게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안전과 문화의 맥락에서 안전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총체적 인식을 기술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음
- 최근 안전에 대한 의미는 단순히 사고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안전(safety)'에서 국가 및 국민들의 안심(安心)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에영향을 미치는 재난 및 긴급상황에 대한 대비·대응까지도 포함하는 안전(security)으로 확대됨

II. 안전문화의 의의

- 문화는 인류가 지닌 지식, 신념, 행위의 총체를 의미함 - 조직관점에서 문화를 접근하면, '조직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고 구성원 행동과 조직행동에 기본전제로 작동하는 조직고유의 가치관과 신념, 규범과 관습 그리고 행동패턴 등의 거시적 총체'라고 할 수 있음(이학중, 2008)
- '문화'를 한 사회 구성원들이 갖는 주요한 행동양식 및 상징체계로서 이해한다면, 유사한 관점에서 문화의 하위체계로서 '안전문화'는 사회 구성원들이 안전에 대해 지니는 공통적인 가치관이자 행동양식이라 할 수 있음

II. 안전문화의 의의

- 안전문화는 안전제일의 가치관이 개인의 생활이나 조직의 활동 속에서 의식화, 관행화되어 안전이 습관이 된 상태를 의미함
즉, 안전을 유도하는 제도, 안전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 안전을 실천하는 의식이 결합해서 만들어낸 사회적인 산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 안전문화는 사회생활에서 위해 또는 위협, 사고부터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구성원들이 안전에 관한 가치, 규범, 행동, 시스템 모두가 준수되는 것으로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김근영, 2012)
- 안전문화는 모든 종류의 안전범위와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인 또는 조직구성원에게 안전에 대한 의식이 내포되어 생활 전반 및 조직활동에서 의식적·관행적으로 체질화된 상태가 되어야 함

II. 안전문화의 의의

2. 안전문화의 필요성

- 최근 발생되고 있는 안전사고는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이미 예견된 부분에서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
- 재난이나 위험에 둔감하여 안전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하여 상황이 반복되는 경우, 사회적인 안전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안전문화도입기(법규로 예방활동을 강제하는 단계) ⇒
안전문화도약기(스스로 위험을 발굴하는 단계) ⇒
안전문화성숙기(예방활동이 문화로 정착된 선진화 단계)로의 변화가 필요함

III. 안전문화의 현재

1. 충남 도민 의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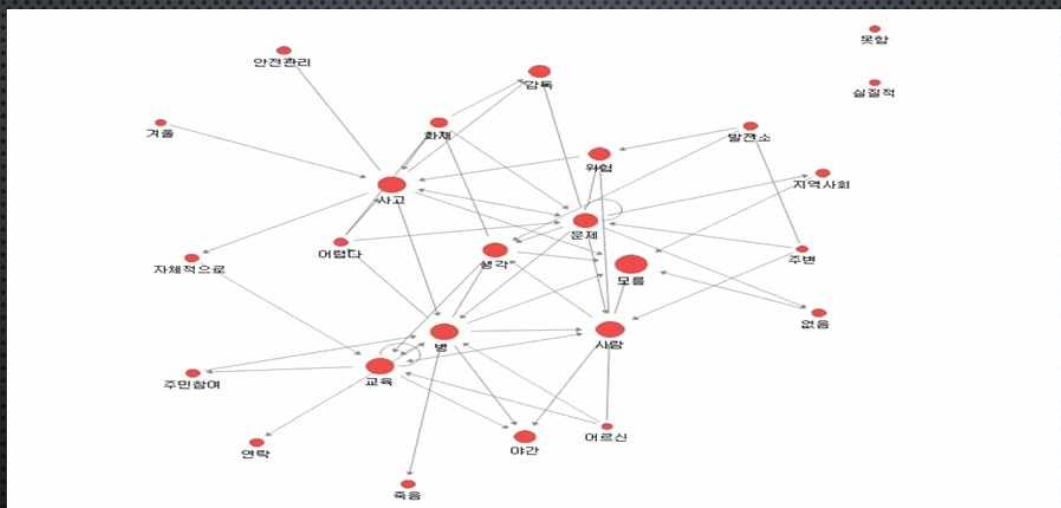
- 도민 93명을 대상으로 충남의 안전비전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심층 면접을 실시함
- 인터뷰 내용은 '①구조 ②참여 ③의식 ④힘 ⑤미래' 5개 영역으로 군집됨

Ⅲ. 안전문화의 현재

<표 1> 공통 주제군 및 의미

공통 주제	의미
도시계획에서 시설물 평가까지	사전계획 및 사후관리를 통한 생활안전 확보 필요
협력을 위한 참여와 존중	실제적 주민 의견수렴과 민간의 활용범위를 유연하게
의식의 편차 학습된 무기력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 주민들의 불신과 무기력감 해소노력 필요
시스템 부재	자율적 생명보호를 위한 자구노력을 지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갈등의 조정	시공간 갈등, 주민간 갈등 발생 심화, 도에서 조율과 협상기능 강화
교육의 변화	리더를 위한 안전교육, 찾아가는 위급상황 대처교육
공동체성 회복	지역의 성격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안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회적 형평	안전은 사회적 기본권, 소수자들의 목소리 반영 필요
환경 복구	환경오염이 안전을 침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
새로운 진화	급변하는 재난안전환경을 파악하여 선제적 대응 노력

Ⅲ. 안전문화의 현재



<그림 1> 도민 의견수렴 언어네트워크 분석 결과

Ⅲ. 안전문화의 현재

2. 충남 안전사고 관련 보도

1) 충남 연안 관광객 안전사고 증가

2012년~2014년 14명 사망

- 연안해역에서의 체험활동과 해양레저를 즐기는 관광객이 늘면서 안전사고도 증가해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충남도와 보령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충남에서 연안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14명에 달한다. 특히 해수욕장 갯벌에서의 사망사건은 78.5%(11건)를 차지, 갯바위 갯벌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해안은 조석 간만의 차가 큰 탓에 해루질(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 등 연안체험 활동과정에서 갯벌고립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바닷물이 들어오는 속도는 시속 7km 이상으로 빠른데다가 안개 발생 등 기상 상황이 급변하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체험객들의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서해안에서는 올해도 44건의 갯벌고립 사고가 발생하고 6명이 사망했다.
- 바다낚시 인구가 늘면서 낚시배와 관련한 사고도 빈발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충남도내에서 발생한 낚시배 사고는 101건에 달한다. 일부 선주와 낚시객들의 실수, 혹은 의도적인 위법행위로 바다낚시와 관련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21일에도 보령 오천항에서 낚시어선과 바지선이 충돌해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대전일보, 2015년 8월 21일 기사).

Ⅲ. 안전문화의 현재

2) 충남 안전사고 증가 대책마련 요구

- 충남 천안과 아산지역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 19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맹정호(서산1·새정치) 의원이 충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천안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2013년 883건에서 2014년 929건, 2015년(8월말 기준) 750건이다.
- 인근 아산지역도 2013년 454건, 2014년 492건, 올해 339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같은 기간 충남지역 전체 학교에서의 안전사고는 2687건, 2949건, 2236건으로 늘고 있다(동양뉴스통신, 2015년 11월 20일 기사).

Ⅲ. 안전문화의 현재

3) 안전규정 무시한 시설이 사고 불러

- 충남 관내 학생들이 겪는 안전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되고 있다. 도교육청에 의하면 2011년~2015년 도내 초·중·고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만3372건, 안전사고에 따른 피해 보상액은 총 94억원4400만원에 달한다.
- 안전사고 발생, 어떤 문제점이 있나?
- 충남도의회 김석곤 의원에 의하면 충남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중 계단과 복도에서 발생한 사고는 각 1043건(8%)과 896건(7%)으로 집계, 비율상 전체의 15%에 이르며 사고의 원인으로는 계단 등의 시설물 설치가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 실제로 A 초교 재학생 이 모 군은 최근 학교 계단을 오르다 넘어져 치아가 깨지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A 초교에 설치된 계단은 첫 단과 끝 단 차이가 20cm를 초과, 법적 기준인 16cm를 어긴 상태였다.
- B 고교의 박 모 군 역시 학교 계단에서 발을 헛디뎈 무릎을 다쳤다. 학교 측이 시설공사 중 인테리어 등 마감재를 추가해 계단의 너비를 좁힌 탓이다.
- 이처럼 계단 너비가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학교는 도내 682개 중 119개(17.4%), 계단의 경사도가 평균보다 가파른 학교는 10개로 파악된다는 것이다(충남넷미디어, 2016년 6월 2일 기사).

Ⅲ. 안전문화의 현재

4) 수확철 농기계 교통사고로 연평균 70명 사망

- 가을 수확철을 앞둔 가운데, 최근 5년간 농기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연평균 70여 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 연도별 사망자 현황을 보면 ▲2011년 45명 ▲2012년 83명 ▲2013년 99명 ▲2014년 75명 ▲2015년 65명이다. 한 해 평균 사망자가 약 73.4명에 달한 셈이다.
- 시·도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9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57명, **충남 47명**, 경남 31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사고 원인으로는 '운전자 부주의' 또는 '운전미숙' 등의 인적 요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 강석호 의원은 "최근 영농인구 고령화 추세로 일손이 부족한 많은 농가가 기계화 영농에 의존하는데, 이 때문에 농번기마다 각종 안전사고와 교통사고가 빈번하다"면서 "무엇보다 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 스스로 주의와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KBS 인터넷 뉴스, 2016년 9월 18일 기사).

Ⅲ. 안전문화의 현재

3. 안전문화 증진 프로그램 운영 현황

1) 충청남도 교통 연수원 : 교통안전캠페인

- 운영 목표**
- 충남도민의 '교통사고 줄이기' 참여 및 관심 제고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이 확보되는 등곳길 조성

구분	내용
실시지역	충남 시·군별 교통사고가 많은 학교 앞, 교차로 등
추진기간	2016.03월 ~ 2016.12월
참여단체	도(시·군), 경찰서, 운수단체,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 등 교통관련 기관 및 단체
주요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사고 예방 홍보물 (리플릿, 홍보물) 등 배포 • 안전띠 착용, 횡단보도 이용, 이륜차 교통안전 등 독려 • 어깨띠 패용, 현수막 게시를 통한 교통안전 홍보

Ⅲ. 안전문화의 현재

2) 충청남도 안전체험관

- 어린이 체험관, 상설 전시관, 방재센터, 안전극장, 도시철도 사고 체험관, 고층화재 체험관, 교통사고 체험관, 실태화재 체험관, 지진 체험관, 산불·산사태 체험관, 태풍 체험관, 수난안전 체험관 등을 운영하여 방문한 관람자들을 위한 체험 및 주의사항을 전달하는 공간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Ⅲ. 안전문화의 현재

3) 코레일 대전충남본부 : 안전한 철도건널목 만들기 대국민 홍보

- 코레일 대전충남본부는 2016년 9월 5일 직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국민 홍보 캠페인과 교통량이 많은 홍도2건널목 등 관내 9개 철도건널목과 건널목을 자주 통행하는 인근 학교, 마을회관 등을 찾아 안전캠페인을 실시함
- 이 캠페인은 가을 행락철 및 추석 명절 연휴 등 교통량 증가에 대비 대국민 안전의식 향상과 직원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됐으며, 일반 시민과 철도 이용객을 대상으로 전단과 홍보 용품을 나눠주며 철도 교통안전을 홍보함

Ⅲ. 안전문화의 현재

4) 미래엔서해에너지 : 사용자시설 가스안전캠페인

- 미래엔서해에너지는 2016년 4월 충남 예산군에서 가스안전 캠페인 일환으로 사용자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함
- 예산군 예산읍 소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세대별 노후 보일러와 연소기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개선 조치하였으며, 소비자들에게 가스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가정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자율안전 방법 등을 홍보 및 안전수칙 책자도 전달

Ⅲ. 안전문화의 현재

5) 홍성군 : 등갓길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 홍성군은 2016년 6월 홍남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함
충남도청, 홍성경찰서, 홍성교육지원청, 충남교통연수원, 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지사,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교통 협력단체들과 합동으로 교통안전 규칙에 익숙하지 않은 저학년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
- 캠페인에서는 주변 통행 운전자들에게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규정 속도 지키기, 불법 주·정차 안하기 등 기초 교통 법규 준수하기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

Ⅲ. 안전문화의 현재

6) 아산시 : 민·관 합동 안전 캠페인

- 아산시는 2016년 1월 '제238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지난 7일 안전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
- 시 공무원과 대한적십자아산지구협의회, 아산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아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아산녹색어머니연합회, 국민안전현장관찰단, 스파비스 안전담당자 등 민·관 합동으로 겨울철 화재예방과 결빙 및 폭설에 의한 미끄러짐·넘어짐 사고 발생에 대한 리플릿 등을 제공하며 시민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

IV. 안전문화 향상을 위한 제언

1. 주민참여

- 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구축이 필요
-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함
- 지역사회 내의 안전문화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의 민간단체를 구성
- 도 및 지역사회의 안전체험을 적극 장려하여 주민이 직접 안전에 대해 인식하고 안전문화의 습득, 내면화를 유도함

IV. 안전문화 향상을 위한 제언

2. 의식개선

- 안전에 인식을 향상시키는데 도민에 대한 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충남 도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되어야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음
- 성숙한 안전문화를 정착하는데 안전불감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사례 및 자료를 도민에게 제공하여 경각심을 갖도록 유도
- 자료의 접근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제공 매체의 다양화가 필요함

IV. 안전문화 향상을 위한 제언

3. 홍보강화

- 아무리 좋은 정책과 프로그램을 구축할지라도 주민이 인지하지 못하면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 안전문화에 대한 홍보 자료 및 책자, 매뉴얼을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고려한 홍보가 필요함
- SNS를 통한 홍보는 연령별로 전파되는데 차이를 나타내어 이를 고려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도내 연령별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홍보 수단 및 전략이 제시되어야 안전문화의 향상과 이를 토대로 한 실천이 가능할 것임



<그림 2> 충남지역 학교 현황
출처: 2015 충남통계연보 p.24

IV. 안전문화 향상을 위한 제언

4. 사회적 관계망 확대

- 도민들의 사회적 관계가 다소 약화되고 있음 (2013▶2015)
: 부탁할 사람(3.24명▶3.04명), 이야기 상대(2.83명▶2.69명), 친목단체(1.25개▶1.18개)
⇒ 거주지역 단위로 네트워크가 유지·강화될 수 있는 정책 개발로 안전문화를 확산시켜야 할 것임
-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민간단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과 도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전문연구기관의 주도하에 안전망을 운용할 필요가 있음

IV. 안전문화 향상을 위한 제언

5. 통합관리시스템

- 안전문화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 안전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 중요성을 내면화하여 자율적인 실천이 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 안전불감증 개선활동, 위험 조기발견, 피해도민 지원 및 상담,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향상 활동 등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함
- 안전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서 안전문화를 정착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V. 맺는말

- 문화는 그 의미를 쉽게 정의하기 곤란한 특성을 내포하고 있음
- 안전문화는 변화하는 위험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 공동체를 통해 가치관이 형성되고 이것이 긍정적인 힘을 발휘하는데는 교육과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우리를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나타나고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동체의 안전문화도 적절하게 변화해야 할 시점임

Thank you

함께 누리는 안전복지

양기근 교수(원광대학교)

정원희 교수(건양대학교)

1. 현황 및 여건변화

1.1. 현황 및 문제점

- 안전에 대한 정의는 ‘개인에게 손상을 끼치는 수용 불가한 위험이 없는 상태’로 정의될 수 있으며, 재난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기술의 진보, 여가와 웰빙을 추구하는 생활환경 변화로 일반 국민의 기초적인 안전 서비스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안전을 전제로 하지 않은 사회복지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으므로 지방정부의 안전복지 정책은 중요함.
- 안전복지란 “사람들의 필요를 맞추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서비스들의 범주 또는 사회적 노력, 사회적 서비스, 노력과 관련된 일체의 체계. 실천 활동” 등으로 정의할 수 있음(성기환·최일영, 2014: 329-330).
- 최근 예측하지 못한 대형 재난으로 지구촌이 신음하고 생활주변에도 안전에 대한 끊임없는 위험이 잠재하고 있어 안전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복지를 생각할 수 없음. 그러므로 안전복지야말로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부의 새로운 영역의 정책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함께 누리는 안전복지와 관련하여 중요한 통계지표가 될 수 있는 노인, 어린이, 장애인, 외국인 등 재난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충남의 노인인구 비율은 2015년 말 기준 16.4%로 전남(20.5%), 전북(17.8%), 경북(17.7%), 강원(16.9%)에 이어 17개 시·도중 다섯 번째로 높음. 충남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5년 말 기준으로 341,214명임.

〈표 1〉 노인인구 비율(시도별)

(2015.12.31.기준 / 단위 :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2.6%	14.6%	12.7%	10.7%	11.3%	10.9%	8.8%	10.6%	10.5%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6.9%	14.8%	16.4%	17.8%	20.5%	17.7%	13.8%	13.8%	

주 :

전국노인 인구비율 13.1%(시도별 전남, 전북, 경북, 강원, 충남 순)

자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 2015년 하반기 충남도정주요통계(2016).

〈표 2〉 충청남도의 노인인구 현황

(2015.12.31.기준 / 단위 : 명)

계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94세	95~99세	100세 이상
341,214	95,903	84,428	76,011	52,160	22,599	7,721	1,712	680

자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 2015년 하반기 충남도정주요통계(2016).

〈표 3〉 충남도 고령화 추이

(단위 : 천명, %)

구 분	2005년	2006년	2009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3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노인인구 (65세 이상)	268	278	307	315	345	402	455	500	617	732	841
비율	13.9	14.3	15.1	15.2	16.5	18.5	20.5	22.2	26.6	30.9	35.2

자료 :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추계(2014.12.)』 (2006년 고령사회진입 → 2023년 초 고령사회 전망)

〈표 4〉 독거노인 현황

(2015.12.31.기준 / 단위 : 명)

구 분	독거노인 수			비고
	계	기초생활 수급노인	일반노인	
道	93,532	16,060	77,472	

자료 : 충남도청 저출산고령화정책과(2016).

- 충남의 2015년 말 기준 아동은 419,355명(어린이 199,560명, 영유아 119,513명, 영아 59,892명)임.¹⁾

〈표 5〉 아동 현황

(2015.12.31.기준 / 단위 : 명)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영 아	59,892	60,759	60,088	59,218	57,304	55,638
영 유 아	119,513	122,376	120,211	118,938	117,484	117,546
어 린 이	223,392	220,191	205,387	200,781	198,513	199,560
아 동	419,355	417,059	394,611	388,503	308,830	374,044
소 년	473,314	472,139	421,085	415,089	407,112	400,146
청 소 년	413,073	410,726	390,225	386,869	381,415	377,004

자료 : 충청남도 사회복지과 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2016).

- 충남의 등록장애인은 124,751명으로 전국 2,490,408명의 5.01%임.

〈표 6〉 등록장애인 현황

(2015.12.31.기준/단위:명)

구분	합 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충남	124,751	65,646	12,093	13,533	951	10,733	10,826	631	5,140	2,789	222	654	387	121	737	288
전국	2,490,408	1,281,499	252,874	250,334	18,813	189,752	250,862	21,103	98,643	74,468	5,833	12,033	10,324	2,685	14,116	7,069

자료 : 충남도청 장애인복지과(2016).

- 1) 아동의 개념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으며, 주로 유아, 어린이, 소년, 미성년자, 청소년, 자녀의 개념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할 수 있다. 연령에 따른 규정은 다소 차이가 있는데, 국제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법의 경우에는 명칭 및 연령상에 따라 권리와 의무에 많은 차이가 있다. 아동복지의 시초가 되는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외의 다른 국내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률	대상	연령
아동복지법	아동	19세 미만의 아동
영유아보육법	영아 및 유아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유아교육법	유아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아동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9세 이상 24세 미만이 아동 및 청소년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	9세 이상 24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
소년법	소년	20세 미만의 소년
모자보건법	영유아	출생 후부터 6세 미만의 영아 및 유아
모부자복지법	아동	18세 미만의 아동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아동	18세 미만의 아동

자료: 이소희(2002: 20), 아동복지론. 도서출판양지.

○ 충남의 한부모 가족 현황은 7,351세대수, 18,799세대원임.

〈표 7〉 한부모 가족 현황

(2015.12.31.기준 / 단위 : 세대, 세대원수)

구 분		유 형 별						비 고
		계	모 자 가 족	부 자 가 족	청소년 모자가족	청소년 부자가족	조 손 가 족	
道	세 대 수	7,351	5,317	1,670	93	10	261	
	세대원수	18,799	13,740	4,338	193	22	506	

자료 :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실(2016).

○ 충남의 결혼이민자는 14,019명이고, 귀화자는 6,276명임.

〈표 8〉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현황

(2015.12.31.기준 / 단위 : 명)

계	성 별		국적 취득별			
	남	여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소계	혼인사유	기타사유
14,019	1,373	12,646	7,743	6,276	4,499	1,777

자료 :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실(2015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16).

- 충남은 기초생활수급자는 32,010가구(2013년 기준), 사회복지 예산 비율 25.7%, 장애인은 124,721명(14년 기준, 전국 대비 비중 5.0%), 65세 이상 노인 330,807명(14년 기준, 노령화 지수 110.2%), 독거노인 수는 91,893명(충남도 전체 노인인구수의 27.8%), 외국인 54,557명(14년 기준)임.

1.2. 여건변화와 전망

○ 최근 재난안전 환경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상승 등으로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기상기록을 갱신하는 등 점점 다양·대형·복잡화되고 있으며

-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의 위험성 상존 : 우리나라 기후변화는 전 지구 평균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온 및 강수량이 해마다 증가하여 자연재난의 위험이 상존함

- 우리나라의 2099년 기온은 3.0~5.9℃ 상승 예상 (소지구는 1.8~3.7℃ 상승 예상)

자료: 한국기후변화 평가보고서(2014), 환경부·기상청.

○ 도시화·인구집중, 고령화, 기후변화, 신종감염병의 창궐 등 재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가 국민을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커지고 있음.

○ 시설 노후화·인구 고령화 등 위험 사회 가속화 추세

- 시설물의 노후화·고층화·대형화로 인한 위험요인 증가 (50년 이상 노후 시설 다수 : 교량27%, 터널30%, 용벽37%, 승강장17%)

- 고령화, 외국인 노동자 증가 등 안전 취약계층 지속 증가 (65세 이상 인구비율 : '13년12%→'50년37%, 국내체류 외국인 약 160만명('13년 기준))

○ 일상생활 속 위험요소 증대. 항공·선박·기차 등 고위험 내재적 이동수단의 사용 증가, 등산·해양 스포츠·축제 등 위험이 내재된 활동 증가하고 있음

- 우리의 기후·사회구조적 재난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반면, 재난관리 국가경쟁력은 OECD 국가 중 하위권 (25위/34개국, 2014)

자료: 국민안전처(2015),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5-2019)」.

- 또한, 새로운 유형의 불산, 염산 등 화학누출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외국인, 다문화 가정 등 재난취약계층은 양극화, 고령화, 국제화에 따라 증가 추세임.
- 새로운 재난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여건 및 생활환경 제약 등으로 인해 재난의 심각성에 대한 대처 및 준비에 여유가 없어 재난에 대한 자발적인 대응과 체험활동 등이 미흡한 실정임.

1.3. SWOT 분석

☐ 강점요인

- 스마트폰 등 첨단 IT를 활용한 재난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 취약계층 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관리 전문 연구센터(충남연 재난안전센터) 활용 가능

☐ 약점요인

- 생계로 생활여유가 없어 재난교육·체험 및 재난정보를 제때 받지 못함
- 생계유지, 거동불편 등으로 재난·안전에 대한 인식과 대처능력 부족

☐ 기회요인

-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정부의 관심 증대
- 취약계층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변화 및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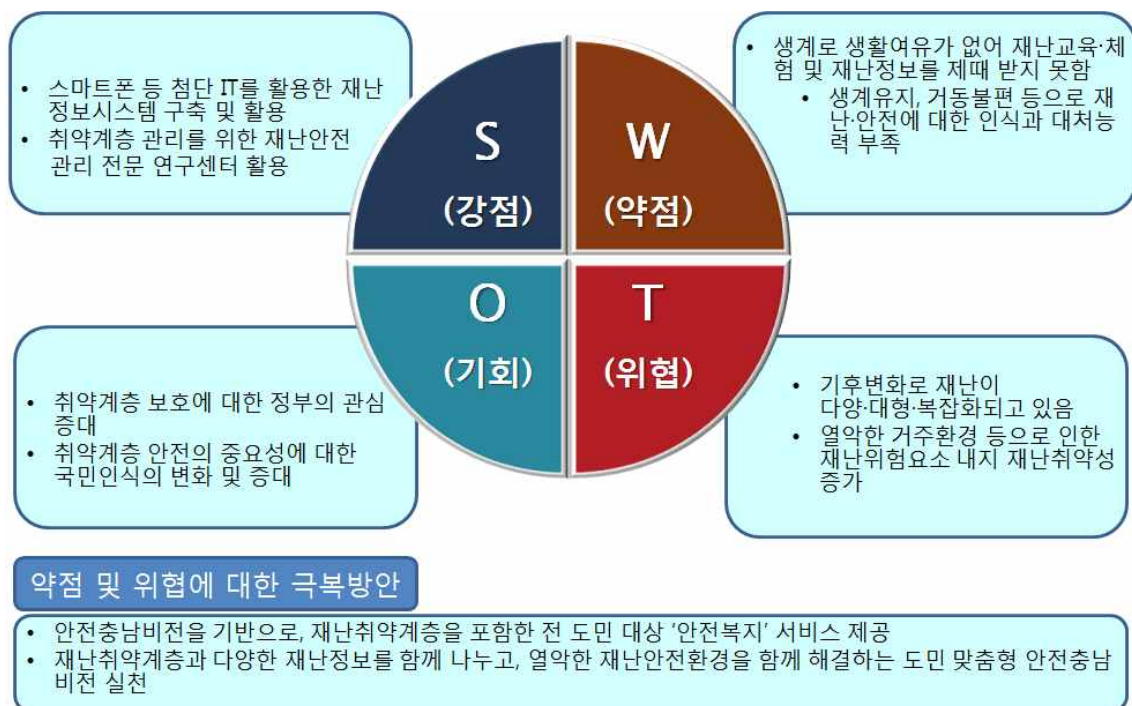
☐ 위협요인

- 기후변화로 재난이 다양·대형·복잡화되고 있음
- 열악한 거주환경 등으로 인한 재난위험요소 내지 재난취약성 증가

□ 약점 및 위협에 대한 극복방안

- 안전충남비전을 기반으로, 재난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도민 대상 ‘안전복지’ 서비스 제공
- 재난취약계층과 다양한 재난정보를 함께 나누고, 열악한 재난안전 환경을 함께 해결하는 도민 맞춤형 안전충남 비전 실천

〈그림 1〉 안전복지 SWOT 분석



2. 기본방향

- 함께 누리는 안전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방향으로는 사각지대 없는 안전 복지 구현과 맞춤형안전복지 실현으로 설정함.
- 사각지대 없는 안전복지 구현은 재난심리안정지원, 사회안전망구축, 사회자본 형성의 구체적 전략과제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함.
- 맞춤형안전복지 실현은 생애주기재난안전교육, 맞춤형안전민원해결 안전신문고, 재난취약계층배려의 구체적 전략과제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함.

□ 사각지대 없는 안전복지 구현

○ 안전복지 건강 프로그램 지원

- 추진사업: 재난 정신건강 지원센터 운영, 재난건강보건위원회 구성을 통한 안전복지 실현, 지역사회 재난 병원 지정,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안전복지를 위한 손상예방, 손상감시 프로그램 운영

○ 안전복지 사회안전망 구축

- 추진사업: 새로운 충청남도 안전복지 모델 개발 및 정착, 안전문화증진 사회안전망 조례 제정, 충청남도 안전사각지대 해소 민·관 협력 강화, 원거리 지역 안전마을 조성 및 확산, 안전복지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 사회자본 형성을 통한 안전복지 품질관리

- 추진사업: 도민 안전복지지수 개발로 안전복지 행동변화 유도, 지역산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으로 안전복지 실현, 안전복지 통계 및 분류 개편으로 안전복지 품질관리, 지역 재난환경을 고려한 안전복지 컨설팅 추진 운영, 안전복지 품질관리를 위한 과학적 재난 피해조사 실시

□ 맞춤형안전복지 실현

○ 생애기주 재난안전교육

- 추진사업: 재난안전교육 조례 제정,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 기반 구축, 대도민 홍보, 재난안전교육 인프라 확충,

○ 안전민원해결 안전신문고

- 추진사업: 국민안전처 안전 신고 포털인 안전신문고 연동시스템 구축, 안전신고 포상제, 안전신문고 홍보 및 사용교육

○ 재난취약계층 배려

- 추진사업: 재난환경을 고려한 함께 누리는 맞춤형 안전복지 종합대책 마련, 재난취약시설로부터 재난약자 보호, 수요자 눈높이 고품질 안전복지서비스 제공, 찾아가고, 찾아오는 재난안전교육 및 훈련문화 정착

〈그림 2〉 안전 충남 비전 체계도 및 함께 누리는 안전복지 전략과제



3.1 사각지대 없는 안전복지 구현

3.1.1 안전복지 건강 프로그램 지원

가. 필요성 및 목적

- 과거와 달리 재난의 대규모화와 함께 급작스런 재난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지는 상황임. 2016년 22년만에 갑작스러운 폭염이나 경주의 강도 5.8 지진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재난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자연재난 이외에도 최근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인위적 재난도 끝없이 발생하고 있음
- 이처럼 과거와 달리 건강에 대한 본질도 변화하고 있는 상황
 - 과거의 경우 전염성 질환 등이 건강에 가장 중요한 관심이었으나 최근의 경우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심리적 상처나 건강 등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음
-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은 한 지역이나 국가에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와 막대한 영향과 파급효과를 초래함
 - 예를 들어 재난발생으로 개인이 애도, 사망의 위협, 자신이나 가까운 친척의 건강에 대한 위협, 재산권 침해와 재정적으로 안정이 손실되거나 직장을 잃는 등과 같이 재난과 관련된 경험을 자원의 손실과 손실의 위협으로 간주할 때 이러한 스트레스요인들은 심리적 어려움을 발생시키게 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 우울, 알콜 의존, 남용 등과 같은 단기 또는 장기적인 심리 장애를 유인 할 수 있어 재난으로 발생하는 지속적인 심리적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임(이선자 외, 2006: 3)
- Eun-Hee Chae(2005)는 재난의 단기 영향연구에서 재난발생 여부에 따라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수준과 주관적 건강상태 및 신체적 증상과 보건복지욕구 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고, 이선자 외(2006)는 재난과 비재난지역의 장기영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적인 건강상태와 정신건강 모두 재난지역이 더 나빠진 것으로 조사됨
- 따라서 사각지대 없는 안전복지 구현을 위해서는 재난에 대한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임. 지역사회 안전복지 실천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의

활용으로 안전한 충남을 만들 수 있음

나. 추진사업

□ 재난 정신건강 지원센터 운영

- 재난 정신건강 지원센터는 전체 도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집단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일반적인 활동과 개별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치료를 위한 활동으로 구분하여 실시
- 재난 시 성공적인 정신보건 의료활동을 수행을 위해 재난사건이 발생후 1, 2일 이내에 정신보건 의료활동 실시를 대책본부에서 선언하고 담당자가 업무를 시작하며 정신보건의료 담당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여 지역의 조직화, 방문대상선정, 방문중지 결정, 외부원조자와의 연계 등 현장의 판단에 따라 즉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재난직후 평소처럼 정신보건 의료활동을 실행하되 지속성을 유지시키며 여러 직종의 사람들과 접촉하여 주민의 상태를 파악하고 상담하며 상황에 따라선 재난현장에 직접 나가서 활동하며, 일시에 몰리는 정신보건의 제공자를 조정
- 대상자를 직접 찾아나서는 outreach활동을 전개
 - 우선적으로 주의해서 지켜볼 사람을 check list를 통해 screening 함
 - 다음단계로 대상자에게 정신보건서비스와 심리적 응급처치를 제공
 - 심각하여 치료를 요하는 대상자는 다시 screening하여 의학적 조치 여부를 결정
 - 핫라인 등을 통해 긴급히 정신·심리적 지지를 제공

□ 재난건강보건위원회 구성을 통한 안전복지 실현

- 충청남도의 재난 매뉴얼이나 의료 긴급체계 및 재난준비 매뉴얼에 재난건강 보건서비스를 포함

- 충청남도의 역사, 문제의 특성, 장애나 질병에 대한 인식, 대처방법 등 지역문화전반과 지역의 잠재적 외부자원 에 대한 넓은 사정이 선행된 후 신중한 계획아래 지침서 작성
- 재난건강보건위원회가 재난다발지역주민 중 고령자, 저학력, 저소득층, 어린이 등은 건강보건서비스 집중관리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여 관리

□ 지역사회 재난 병원 지정

- 재난의료 전달에 있어 환자들의 요구와 기대, 재난 환자의 첫수용자로서 의료기관의 역할과 실제 상황에서 의료기관에 요구되는 재난 대비/대응 역량에 대한 요구가 높고, 재난의료의 공적 서비스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의료기관 재난 대비/대응 체계는 재난의료의 특성에 맞게 전문적이지 못하며, 미미한 실정이고, 의료기관 재난 대비/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공적 지원 또한 부족한 실정
- 특히 국가재난의료체계의 국공립 또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의 지원만으로는 모든 재난 지역과 재난 영역을 포괄, 대응할 수 없으며, 국가재난의료지원단(Disaster Medical Assistant Team; DMAT)의 경우는 현장 재난의료 영역으로 의료기관의 재난 대비/대응 체계 및 재난의료 영역과는 다름
- 따라서 일반적인 병의원 중 재난 관련 병원 지정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이는 대형종합병원이 아닌 일반적인 병의원으로 이러한 병의원의 경우 의사와 간호사 모두 재난 관련 교육을 받고 치료와 관련된 일을 초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
 - 의료기관은 현장 또는 병원에서 의료인·의료기관 및 공공기관의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 상황에 적합하며, 현실적인 재난의료 전문 교육 프로그램, 미국의 Emergency and Terrorism preparedness for environmental health practitioners(ETP)와 같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양질의 재난의료 시뮬레이션 교육 및 재난의료 전문가 양성 등으로 지역상황에 맞는 재난의료체계의 개발, 점검, 보완 등을 전문성과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음(김수진, 2014)

- 이를 통해 지역의 안전복지에 대한 인프라 확대와 지역 주민의 건강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임

□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 재난적 의료비는 소득수준 대비 의료비 부담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재난적 의료비(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로 정의
 - 세계보건기구(WHO, 2000)는 지불능력(ability to pay) 중 의료비로 40% 이상 지출될 경우로 정의하며, 재난적 의료비는 가구의 본인부담 의료비지출(직접 의료비+건강보험료)이 소득이나 지불능력의 10%-40%를 초과하는 경우로 정의(황도경 외, 2013: 4)
- 재난적 의료비 현황(황도경 외, 2013: 5)
 -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관련 선행연구는 총지출액이나 총지출액-식료품비 대비 의료비 지출 5~10%, 20~25%, 30%, 40%의 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
 -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계 총 지출액 중 의료비 지출이 10%에 해당하는 가구는 각각 10.36%(이태진 외, 2003), 11.8%(이원영 외, 2005), 14.6%(최정규 외, 2011), 21.5%(김교성 외, 2012)로, 18.68%(이태진 외, 2012)로 나타남
 -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총지출액에서 식료품비를 제한 금액 중 의료비 지출이 10%가 넘는 가구가 각각 32.2%, 44.7%로 나타났으며, 20%가 넘는 가구는 각각 19.5%, 23.7%, 30%가 넘는 가구는 각각 12%, 13%로 나타남
 - 결국 저소득 가구 일수록 의료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따라서 비용적으로는 가구의 의료비 지출로 가구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와 질환별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

□ 안전복지를 위한 손상예방, 손상감시 프로그램 운영

- 안전도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사고로 인한 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로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안전도시의 이념은 1989년 스톡홀름 사고손상세계 학술대회 선

언문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지역구성원의 태도와 행동, 구조변화를 통해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이러한 안전도시는 손상예방 프로그램과 손상감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임
-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 행위 등으로 인한 신체건강상의 해로운 결과로서 사고나 폭력 그 자체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고위험군, 환경, 위험요인을 적절히 통제함으로 예방이 가능
- 안전증진의 기본 개념은 모든 개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손상예방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된 모든 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 지역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통한 안전생활환경 조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최근에는 개인중심의 손상예방사업과 함께 사회·환경적 영향에 대한 관심과 지역사회 및 인구집단 중심의 접근이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WHO는 안전도시사업 모델의 도입을 권장하고 있음
- 따라서 충청남도 역시 손상예방 프로그램과 손상감시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안전복지를 실현할 필요가 있음
- 손상예방 프로그램은 학교안전프로그램, 어린이안전프로그램, 지역안전프로그램, 노인안전프로그램, 교통안전프로그램 등의 운영이며,
- 손상감시 프로그램은 충청남도 도민에게 발생하는 손상문제와 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수집, 분석하는 시스템임

3.1.2 안전복지 사회안전망 구축

가. 필요성 및 목적

- 재난으로 촉발되는 위험은 언젠가는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불확실한 사건의 발현 또는 과정으로 사람들의 복지를 위협하게 만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현대 사회에서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은 ‘삶의 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됨(이재열 외, 2005; 성기환·한승환, 2009: 80)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재해 약자를 고려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대한 시스템이 미흡한 실정
- 법률에서도 이러한 안전에 대한 규정이 존재
 - 헌법은 제34조에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규정에서 국가가 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와 함께 여성의 권익 향상, 노인·청소년의 복지, 장애인 및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의 보호의무를 함께 규정함으로써 안전복지가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할 국민에 대한 복지의 하나라는 뜻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음
 -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정의로서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
- 따라서 안전복지는 “사람들의 필요를 맞추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서비스들의 범주 또는 사회적 노력, 사회적 서비스, 노력과 관련된 일체의 체계. 실천활동” 등으로 정의될 수 있음(전영옥, 2008)
 - 안전복지는 대규모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재난뿐만 아니라 최근 기술진보, 기후·주거환경 변화 등에 따라 생활환경에 잠재해 있거나 내면적인 위험요소까지 해결하려는 예방적 복지(성기환·한승환, 2009: 82)
 - 또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적인 안전보호를 사회보장의 한 영역으로 끌어들이어 찾아서 해결하는 한편, 재난피해 충격에 따른 치유와 자활 지원 등 그 동안 돌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새로운 형태의 안전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능동적 복지임(전영옥, 2008)

- 결국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사회안전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제기되고 있어 이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정책의 제도적 확대를 위해서도 사회안전망 구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안전복지 사회안전망 구축을 논의하고자 함

나. 추진사업

□ 새로운 충청남도 안전복지 모델 개발 및 정착

- 안전에 대한 정의는 ‘개인에게 손상을 끼치는 수용 불가능한 위험이 없는 상태’로 정의되고 있음(Fido & Wood, 1989). 그러나 절대로 안전한 상태는 존재하지 않으며 주어진 시간과 작업하는 환경, 그리고 개인적인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안전함의 정도가 결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안전에 대한 개념임(Cox & Cox, 1996: 19)
- 안전에 대한 통합적 관점에서 인간, 물리적 구조, 환경의 세 가지 요소가 이해되어야 함. 인간 요소에는 인간의 태도, 믿음, 성격, 행동 등 안전 문화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소가 포함되며, 물리적 요소에는 인간이 사용하는 장비나 도구, 물자 등이 포함됨. 환경 요소에는 인간이 활동하는 공간이 갖는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물리적 특징들이 포함됨
- 따라서 안전복지의 세 가지 요소인 인간적 요소(안전의식), 물리적 요소(물자, 시설), 환경적 요소(조직체계)를 통해 새로운 안전복지 모델의 개발 및 정착이 필요(성기환 · 한승환, 2009: 91)
- 첫째, 통합적인 안전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 재난관리단계별 프로세스조직으로 재난예방단, 재난대비단, 긴급대응단, 복구지원단의 구성을 제안하면서 안전진단반, 생활안전지도반, 복지지원반의 기능을 강화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체계 확충. 특히 이에 대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 중요
- 둘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도민안전복지모델의 운영. 안정된 운영을 위해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훈련체계 확립과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 확보의 중요. 또한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조례 제정, 전담부서 마련, 정규 교육과정

- 강화, 도 재난안전네트워크의 활성화 등 필요
- 셋째, 도민 안전복지서비스의 역량 강화. 도민 안전복지서비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도의 지원, 지역기업체와의 협력 그리고 민간의 전문성 강화 필요

□ 안전문화증진 사회안전망 조례 제정

- 안전문화증진과 관련해서는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제8조 안전문화 진흥과 관련된 규정이 존재
- 그러나 규정의 내용이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등으로 일반적인 내용임
- 따라서 취약계획에 대한 안전관리내용에 대한 강화 등이 없어 이에 대한 충청남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함
- 또한 각종 신종레포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안전복지에 대한 조례가 제정될 필요가 있음
- 그 외 도서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 다양한 안전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법제도 운영이 필요
- 홍성군의 경우 2009년 도서지역 안전점검을 통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기도 하였음

□ 충청남도 안전사각지대 해소 민·관 협력 강화

- 서울시는 2016년 4월부터 시민과 함께 재난위험시설(D·E등급)을 관리하는 제도를 시행
- 이 제도는 살피미, 도우미, 지키미 등 4~5인 내외로 민·관 협력체 ‘더안전시민모임’을 구성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관리 중인 D·E등급 시설을 살피는 제도

- 살피미는 재난위험시설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 2~3명을 위촉해, 평소 생활 속에서 시설을 관찰하다 위험요소가 발생되면 즉시 시설관리부서에 신고하도록 하는 조직
 - 도우미는 시설별 특성에 맞는 관내 거주 중인 관련분야 기술사, 건축사 등을 전담 전문가로 지정되며, 살피미로부터 위험요소 발견 신고시 현장점검 및 보수·보강 방안 자문
- 더안전시민모임 구성원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관련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대상 시설 외에 있는 안전사각지대를 발굴하는‘안전사각지대 발굴 회의’에도 참여
- 이를 벤치마킹하여 충청남도의 경우도 안전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난 위험시설 관리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 결국 관에서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을 민과 함께 운영함으로써 안전복지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음

□ 원거리 지역 안전마을 조성 및 확산

- 소방관서와 원거리 지역 화재 등의 경우 초기 대응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 특히 농촌지역이 대다수인 충청남도의 경우 노령인구의 증가 및 노후주택, 소방차량 진입로 협소 등 출동장애에 따른 신속한 대응방안이 미흡
- 이를 위해 기초소방시설 보급, 전기·가스 등 년 1회 합동주택 안전점검, 주민기초건강검진 실시, 소방교육 실시 등을 통해 안전마을 조성
- 민관 협력체계를 통한 신속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마을단위 소화기 배치 관리, 원거리 지역 미니 소방서 설치·운영 등이 필요
- 북촌한옥마을의 경우 자위소방대를 구성하였으며, 인천의 경우 합동 봉사활동을 통한 어르신 건강검진 실시, 경기도는 마을회관에 우리마을 미니 119센터 설치 등을 추진
- 따라서 충청남도 역시 도민의 안전복지를 위한 다양한 안전마을 정책이 필요

□ 안전복지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 재난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 왜곡된 정보 등으로 인한 위기 증폭 및 사회적 갈등 예방 필요
 - 공공영역의 다양한 위기발생 가능성에 따른 선제적 대응전략 필요
 - 위기 자체가 주는 위협보다 불필요한 오해·왜곡된 정보 등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로 인한 위기 증폭 및 사회적 갈등 예방 필요
 - 복합적 재난·사고 발생시 이해관계자간 커뮤니케이션 전략 필요
- 안전복지 커뮤니케이션 전략 및 가이드라인 수립
 - 도민들의 위협에 대한 이해와 안전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도민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도시 노후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재난·사고 등 위기상황에 대응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및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해 안전복지 관리역량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
 - 이를 위하여 위기 및 안전복지 커뮤니케이션의 개념, 범위, 내용 등을 정립하고, 국내외 안전복지 커뮤니케이션 사례와 충청남도의 현황 및 실태 분석을 통해 안전복지 커뮤니케이션 전략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

3.1.3 사회자본 형성을 통한 안전복지 품질관리

가. 필요성 및 목적

-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사회자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특히 지역사회의 불균형 및 혁신을 위해서는 사회자본의 형성과 확충이 매우 중요
- Putnam(1993a, 1993b, 1995)은 사회자본을 일련의 공동체의 사회적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 간의 수평적 단체라고 보고 있음
 - 사회자본을 상호간에 이익을 위해 조정 및 협동을 촉진하는 규범, 신뢰, 네트워크와 관련된 것으로 사회구성원의 상호이익을 위해 조정과 협력을 가능하게 하여 경제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봄(황영호·박종관, 2003: 34)
- 사회자본 관련 연구는 경제적 효율성, NGO 활동, 민주주의 정착, 지역사회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안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회자본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
 - 사회자본의 중요한 변수 중에 신뢰와 안전이 포함되어 있으며, 결국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자본의 형성은 매우 중요
 - 실제 손기영 외(2010)는 사회자본 수준 중, 공동체 수준의 사회자본점수가 증가할수록 불안과 우울 영역의 점수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음
- 충청남도의 경우 대부분이 농촌지역으로 농촌은 주민들의 생활 공간이 동시에 생산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며 농업의 특성상 주민들은 협동 의식과 자발적 참여를 필요로 함. 따라서 농촌 지역은 생활과 생산이 엄격하게 구분되는 여타의 도시지역과 달리 관계가 풍부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며 관계성을 기초로 볼 때 도시지역보다 기본적으로 사회자본의 축적 가능성이 높고 지역사회에서의 관계가 중요(손기영 외, 2010: 114)
- 따라서 농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하여 사회자본이 그 거주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임을 짐작할 수 있음
- 결국 충청남도의 안전복지를 위해서는 사회자본의 형성을 통한 안전복지 품

질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안전복지에 대한 지수개발, 지역 근로자의 안전복지 관리, 안전복지 기동대 등의 운영을 통해 안전에 대한 인식제고 및 안전품질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나. 추진사업

□ 도민 안전복지지수 개발로 안전복지 행동변화 유도

- 안전사고 및 인위적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의식 측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전교육에 있어서도 자신의 안전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첫 단계가 되어야 함. 즉 안전교육을 하기 전에 안전의식이 안전에 속해있는지 위험에 속해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한국산업안전공단, 1997)
- 안전사고 및 인위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행동을 해야 하며 안전한 행동은 안전한 습관, 태도 및 지식에 의해서 형성됨. 안전의식의 함양은 안전행동 형성에 기여하는 습관, 태도 및 지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따라서 도민의 안전복지지수 개발을 통해 도민이 가정생활, 직장생활, 여가활동 등의 일상생활과 재난 및 응급상황에서 안전한 행동을 취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태, 태도, 습관, 안전규범, 안전지식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도민 안전복지 지수는 일상생활과 재난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안전한 행동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위적 재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인의 안전역량(행태, 태도, 습관, 지식)을 측정 및 진단하고자 하는 척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행동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각각의 대상(공공기관, 지역사회, 기업체 등)이 보이는 수행의 질을 안전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지표를 정함으로써(예를 들어, 인사고과나 인센티브 제공 등

에 안전수행 정도를 반영하는 것),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안전문화 형성이 유도될 수 있을 것임

□ 지역산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으로 안전복지 실현

- 보통 사람들의 경우 현장이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가정에서 활동하는 시간보다 많음. 이는 재난이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빈도도 현장이나 사무실에 있는 경우가 높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중소기업인 경우가 많아 안전에 대한 무관심이나 불감증이 높은 것 또한 현실임
- KOSHA 18001은 사업주가 자율경영방침에 안전보건정책을 반영하고, 이에 대한 세부 실행지침과 기준을 규정화하여, 주기적으로 안전보건계획에 대한 실행 결과를 자체평가 후 개선토록 하는 등 재해예방과 기업손실감소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기 위한 자율안전보건체계임(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2016년 9월 검색)
- 따라서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인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
- 충청남도는 지역내 기업들에게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절차와 인증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작업장으로 인증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충청남도 근로자 안전복지를 실현

□ 안전복지 통계 및 분류 개편으로 안전복지 품질관리

- 기존의 재난관련 통계들은 기초통계정보이며, 도시화·산업화 등의 진전으로 다양한 재난과 안전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통계나 분류는 과거의 방식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
- 실질적 안전복지를 위해서는 이러한 통계 및 분류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며, 다양한 유형의 안전복지에 대한 통계가 개편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안전복지관련 통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실제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안전복지 중 인적재난의 경우 레저, 자전거 등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내용을 기존의 통계에서는 담지 못하고 있으며, 분류 또한 기타로 되어 있어 구분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
- 도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안전복지 통계에 대한 기반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어 사회와 도민들의 관심에 비해 통계는 미흡한 편임
- 재난취약분야 발굴, 재난통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 그리고 현재 각 기관별로 구축되어 운용되고 있는 인적재난사고 관련시스템과의 연계성 또는 연계를 위한 기본적 인프라가 없는 것 또한 문제임
-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안전복지를 위한 정책입안 및 기본정보로서의 역할이 미비

○ 따라서 다양한 국내외 통계체계를 벤치마킹을 통한 품질관리 방안마련이 필요

○ 특히 분산되어 있는 안전관련 통계들을 통합관리함으로써 기존의 분리방식에 의한 비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지역 재난환경을 고려한 안전복지 컨설팅 추진 운영

○ 지역의 안전수요 증가 및 도민의식향상은 재난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음

- 특히 충청남도의 경우 농가주택 및 단독주택도 많아 이에 따른 화재 재난에 취약한 측면이 존재

○ 따라서 각 지역의 자율안전봉사단을 구성하여 합동점검을 실시

- 맞춤형 안전복지 환경을 제시하고 지원

○ 사회복지단체 및 기관, 의용소방대 등과 연계하여 안전복지가 필요한 이웃에게 맨투맨 안전복지 지원 실시 필요

○ 지역의 자율적 안전기능확대를 통해 안전공감대를 형성하고 안전복지에 대한

품질관리 실시

- 또한 다문화가정을 고려한 다문화가정의 안전복지 컨설팅 운영으로 안전한 충청남도 건설

□ 안전복지 품질관리를 위한 과학적 재난 피해조사 실시

- 지역의 정확한 안전피해 원인조사를 통한 신뢰 확보 및 예방대책 반영 필요
 -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원인에 따라 책임문제가 뒤따르고, 보상·배상문제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원인조사를 통한 신뢰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
 - 또한 재해복구를 위한 예방대책은 피해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원인조사는 적실한 재해복구와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대단히 중요
- 복구과정에 도민이 참여하여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신뢰성 확보 필요
 - 재난이 발생하면 불만이 팽배하고 복구대책에 따라 찬반과 불신이 높은 경향이 있음
 - 복구과정에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역민들이 참여할 경우 복구대책의 실효성이 높을 수가 있고 요구사항을 합리적인 선에서 반영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음
- 따라서 전문기관을 활용한 과학적인 피해원인조사 시행
 - 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안전사고·원인사고 원인감정 전담기구, 법안전센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재난원인 조사센터) 등을 활용하여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여 피해원인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조사결과를 예방대책 수립에 반영
- 도민이 참여하는 지역복구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복구계획의 수립·설계·시행 등의 과정에 재난피해자, 지역민 등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복구대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기회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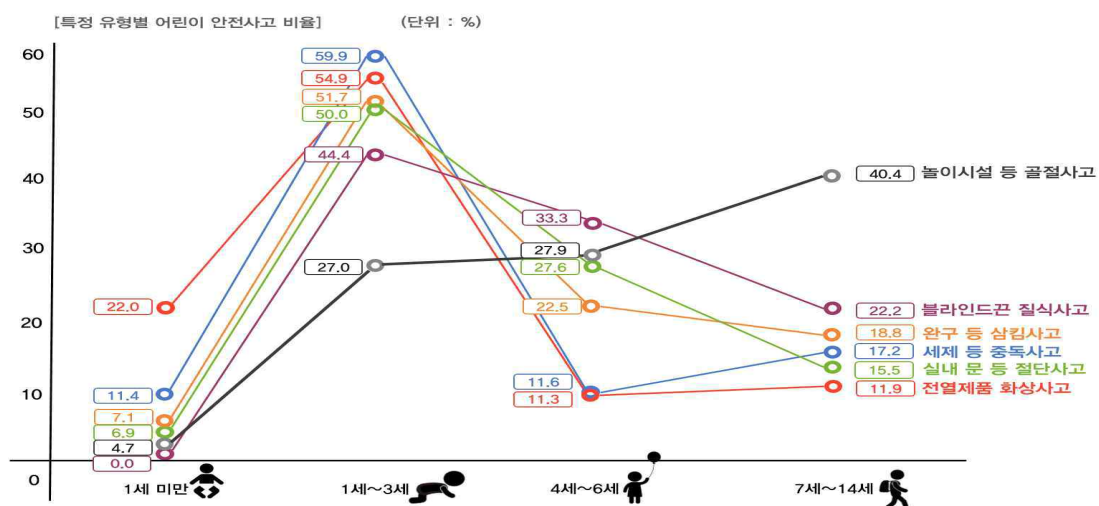
3.2 맞춤형안전복지 실현

3.2.1 생애주기 재난안전교육

가. 필요성 및 목적

-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2016년 9월 12일 경주 지진 등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안전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각종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국민 스스로 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국민 각자의 안전실천 역량개발이 절실함.
- 생애주기별로 생활안전사고의 특징이 다르므로 생애주기특성을 반영한 생애주기재난안전교육이 필요함
 - 아동기 안전사고는 주로 생활안전사고로서 1~3세 사이에 질식사고, 문끼임, 중독사고, 제품이용사고 등 놀이시설 안전사고를 제외한 각종의 생활안전사고가 가장 빈번함.
 - 4~6세에서 현격히 감소하나 놀이시설 등에서의 골절사고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특정 유형별 어린이 안전사고 비율



자료: 소비자위해감시센터(2015).

- 최근 3년간 아동의 사고발생 장소는 가정이 67.5%로 가장 많았고, 여가활동 장소 8.1%, 교육시설 7.6%, 백화점 등 상업시설 5.4% 순으로 많았음(국민안전처, 2015).
- 고령자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곳은 가정(7,617건, 62.5%)으로 나타남. 계절별로는 겨울(4,643건, 38.1%)이 다른 계절에 비해 1.7배~2배 이상, 성별로는 여성(7,047건, 58.3%)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연령이 많을수록 넘어짐·미끄러짐, 추락·낙상사고의 비율이 높았음.
- 국내 안전교육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안전교육과 산업장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어, 여성,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족을 고려한 체계적 안전교육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음
- 영·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안전관련 지식보급과 기술습득을 의무화하기 위해 필요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교재·교구, 안전체험시설, 안전교육 전문강사, 관리체계 등 인적·물적 인프라는 태부족하거나 부재 상태임
- 국내 안전교육의 범주는 교육과정마다 달라 일관성이 없으며, 중복되거나 누락된 채 제공되고 있음
- 교육부의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은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전교육 5대 기준’과 분류기준은 상이하나 내용면에서 중복되고 있는 반면, 고등교육법을 수용하면서 대학생 안전교육이 누락됨

〈표 9〉 생활안전 실천역량 안전교육의 As-Is

생활안전 실천역량 안전교육의 As-Is								
수준	생애주기	안전교육 책임부처	관련법	교육기관	교육방법	강사	교재/매체	비고
Level I	유	복지부 교육부	아동복지법 소방기본법	어린이집/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안전체험관 키자니아 ¹⁾	강의(동영상, 애니메이션) 안전체험관 견학 역학극	어린이집 교사 소방대원 전문강사	· 아동용 애니메이션·동영상 32종, 이터닝 교사 이수시간 15차시 과정 제공 · ‘아동안전사이버교육센터’ (‘13.11) 운영 개시	· 누리과정의 보완 필요 · 5대 기준안에 생활안전분야가 누락됨 · 교육부 안전교육 정책과 중복 · 교육부 44시간 이수 수행실적 -취학 전 기관: 30.6% -초등학교: 12.9% -어린이 안전교육 실태조사: ‘14. 13개 부처 공동조사
	초	교육부	학교안전교육법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소방기본법	각급학교 안전체험관	강의(동영상, 애니메이션) 체험시설 방문 소방훈련 찾아가는 안전교실	일반교사 전문강사 소방대원	· 교육과정별 안전교육 지침서 개발 및 보급 · 학교생활안전 앱 개발(‘15)	· ‘7대 표준안’의 대부분 중 생활안전은 시설 및 제품이용 안전, 신체활동안전, 유괴 및 미아신고 방지 등을 포함
Level II	중·고							
	대학	국민안전처 교육부 국방부	민방위기본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부대 직장 민방위교육장 대한적십자사	강의 및 실습	전문강사	· 지자체별 ‘생활안전길라잡이’교재(pdf파일) · 경기도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표준교안’ 개발 보급 · 재난안전 관련기관, 민간단체의 웹사이트 내 정보마당 · 지자체별 이터닝 매체	· 대학생 생활안전교육 미흡 · 군 심폐소생술 교육은 AED 미포함
Level III	성인	국민안전처 고용노동부	민방위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민방위교육장 직장	강의 및 시범	전문강사 사내직원		· 직장 내 안전보건교육, 민방위교육 외에 타인의 안전을 도모할 교육체계 부재
Level IV	노인	-	소방기본법	노인시설 체험시설	강의 안전체험관 활용	전문강사 소방대원	-	· 화재안전교육 · 승강기안전교육 실시
비고	주) 안전실천시민연합은 미취학 아동(5-7세), 초·중학생·중학생·노인을 대상으로 교통, 화재(전기·가스), 생활(학교·가정), 재난, 물놀이, 승강기, 성폭력(유괴·실종) 강사 파견							

1) 키자니아(Kidzania)는 1999년부터 멕시코, 일본 등에서 오픈한 어린이 직업 체험 테마파크이다.

자료: 이옥철(2015: 127 재인용).

○ 통합적 안전교육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안전교육의 기준이 될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framework 개발이 절실히 요구됨

○ 선순환적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안전교육 연결고리 필요함. 즉, 모든 재난·안전사고에 대해 ‘제도↔점검↔교육↔인프라’의 선순환적 구조가 원활히 가동되기 위해 중간고리로서 대국민 안전교육은 필수적 요소임.

〈그림 3〉 국민안전처 안전혁신 4대 분야 8대 과제



자료: 국민안전처(2015).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나. 추진사업

□ 재난안전교육 조례 제정

- 재난안전교육의 의무화와 관리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안전교육 관련 조례 제정과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수반되어야 할 것임

〈그림 4〉 국내 관련법에 근거한 재난안전교육 현황

주기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노인기
연령	0-5	6-12	13-18	1-29	30-64	65 ~
국내 재난 안전 교육 관련법 (관계부처)	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안전 교육기준 (교육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육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국방부)	(국민안전처)	
				민방위교육(20-40세)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자 관한 법률(연 1시간 이상) (여성가족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청소년 활동 진흥법		

자료: 이옥철(2015: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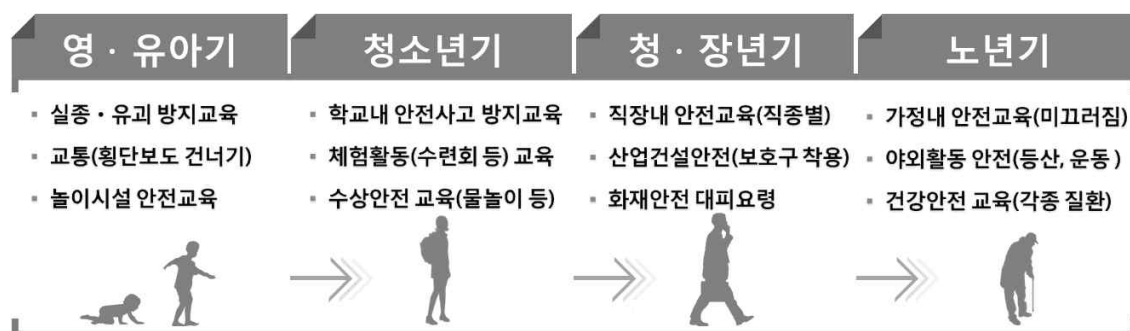
□ 국내 관련법에 근거한 재난안전교육 현황 및 문제점

- 아동과 청소년 기준
 - 『아동복지법』 : 18세 미만
 - 『청소년보호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19세 미만
 - 『청소년기본법』 : 9세 이상 24세 미만
- 관련법간의 아동과 청소년 정의 혼선
 - 일반국민의 기본교육제도에 근거하여 아동은 초등학생으로, 청소년은 중·고등학생에 해당되도록 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국내 재난안전교육과 관련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제정된 관련 법은 없음!!

- 생애주기별 재난안전교육은 기존의 안전교육을 수용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개발된 기본 틀로서, 향후 안전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개발 지원이 이어질 필요가 있음

□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 기반 구축

-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로드맵(Roadmap)을 작성하여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습득해야 할 안전 관련 지식·기능을 맞춤형으로 실시



자료: 국민안전처(2015: 34),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5-2019)」.

□ 재난안전 DB 구축

- 재난안전교육의 성과측정과 변화하는 안전교육 요구도를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재난안전관련 통계체계가 생애주기별재난안전교육 분야와 영역별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DB 구축이 필요함

□ 대도민 홍보

- 생애주기재난안전교육의 중요성과 도민의 불안감을 완화시키고 안전실천역량 강화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재난안전교육 인프라 확충

- 생애주기별 재난안전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맞춤형 교재개발, 전문강사 양성, 체험프로그램 확대개발, 평가체계 개발 등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함
- 재난안전체험시설의 양적 확충을 하고자 할 때, 지역안배보다는 인근 지역주민의 인구학적 특성(연령층, 성별)과 이동거리를 고려하여 중복투자를 막고 가동률을 최대화할 수 있는 확충이 필요함
- 지역사회 특성(원전,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교육시설, 전문강사 확보 등의 계획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임

3.2.2 안전민원해결 안전신문고

가. 필요성 및 목적

- 안전민원해결 안전신문고는 수요자중심 재난관리에 근거한 유비쿼터스 재난 관리시스템으로 볼 수 있음
- IT의 발달로 인한 PC 유형은 다변화되었고, 스마트폰 등과 같은 수단의 사용을 통해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 등에 대한 실시간 접근성은 매우 높아진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다양한 정보와 수단을 통해 민원제기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러한 민원에 대응하는 정부 또한 예전보다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음.
- 이렇게 다변화된 ICT에 발맞춰 정부는 다양한 접근가능성을 위해 기존에 운영해오던 정부부처별 전화민원과 함께 인터넷 민원을 동시에 구현하여 담당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민들의 다양한 재난안전 욕구 요청에 의한 즉시 민원해결팀 구성 필요

〈그림 5〉 안전민원해결 안전신문고 프로세스



- 각종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소방활동을 지원하고, 재난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 충남”실현을 목표로 선진 재난안전정보화시스템 구축

- 재난안전정보화시스템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평가 및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과학화, 자동화하기 위하여 구축, 운영되는 전문 시스템임
- 맞춤형안전민원해결 119는 재난안전정보화시스템의 일종으로 재난안전민원의 즉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시스템으로 볼 수 있음
- 각종 전자정부 분야의 세계 1위 국가로써 재난안전 분야에서도 전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화 수준을 이룩하고 있으며, 스마트기기의 보급 확산을 기반으로 모바일 스마트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추진사업

- 국민안전처 안전 신고 포털인 안전신문고(www.safepeople.go.kr) 연동시스템 구축(서울시 안전신문고 사례 벤치마킹 필요)
- 안전신문고 앱은 생활 주변에서 접하는 화재, 교통, 산업안전 등 각종 취약요인을 국민들이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 간편하게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과 인터넷 포털사이트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 국민안전처에서 2014년 12월 웹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누구나 손쉽게 신고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 6월부터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 서비스를 시행하며 이용률을 높이고 있음

〈그림 6〉 서울시 안전신문고(안전신고·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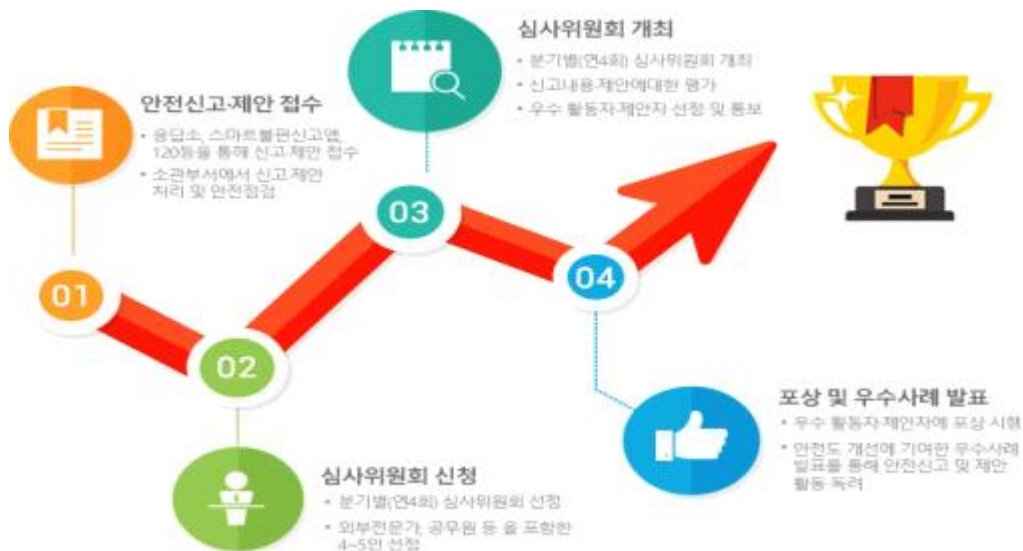


자료: <http://safe.seoul.go.kr/safety-sinmungo>

□ 안전신고 포상제

- 생활 주변의 위해요인이나 재난징후에 대해 시민의 신고와 안전정책에 대한 제안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시행되는 제도
-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신고·제안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분기별 전문가 평가를 거쳐 우수한 신고·제안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충남을 실현(유사사례: 서울시 시행중)

〈그림 7〉 안전신고 포상절차



자료: <http://safe.seoul.go.kr/safety-sinmungo>

□ 서울시 안전신고 포상제 사례

- 포상대상 : 안전도 개선에 기여를 한 제안자 또는 신고활동 우수자
- 포상금액 : 5만원 ~ 최대 100만원(외부전문가 평가를 거쳐 차등 지급)

※ 포상제외

- 이미 조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 우리시·자치구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등
- 포상시행 : 2015년 6월, 9월, 12월

□ 안전신문고 홍보 및 사용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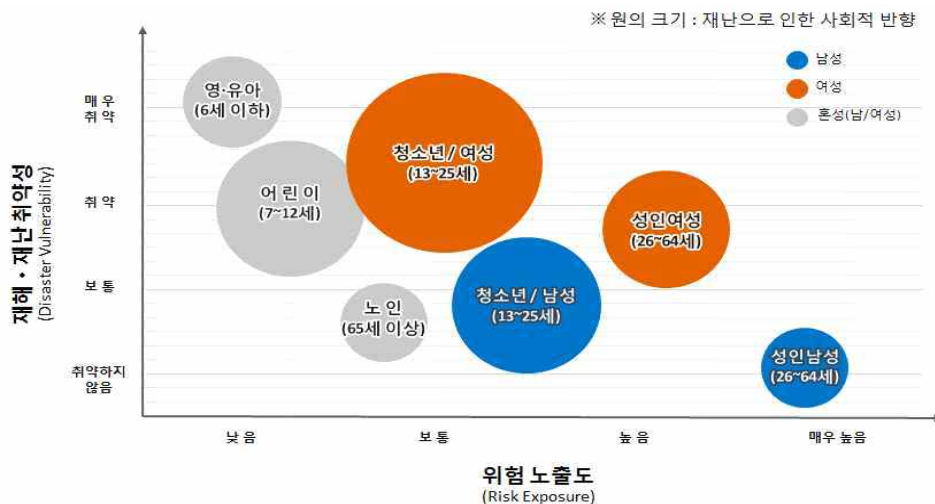
- 안전신문고 사용 극대화를 위한 홍보 및 사용교육 실시 필요
- 일부 노인 등을 포함한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못한 도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용방법 개발 및 사용교육과 홍보 필요

3.2.3 재난취약계층 배려

가. 필요성 및 목적

- 국민안전처의 2015년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 의하면, 총인구 5천만명 중 재난 안전약자는 약 36%로 구성되어 3명 중 1명이 안전약자임. 이중 아동은 9백 30만명(18%), 장애인은 2백50만명(5%), 고령자는 5백30만명(11%), 국내체류 외국인은 1백50만명(3%)임.
- 이렇듯 재난안전약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정부의 관심, 예산, 담당 조직,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이 미흡한 실정임.
- 성인여성의 경우, 위험노출도와 취약정도는 보통이상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 직장여성과 달리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등 보호자로서의 역할비중이 큰 가정주부의 경우, 안전교육의 기회는 전무한 실정임.

〈그림 8〉 성별·연령별 재난안전 취약정도



자료: 국민안전처(2015), 2년간 국민안전 체감도 분석결과.

-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을 야기하는 위험인자로부터 피해받기 쉽거나 받은 피해로부터 복구행위가 어려운 사람 또는 계층”(심기오, 2010: 9)을 표현하는 용어로서 재난약자, 재해약자, 안전약자, 재난취약자, 재난취약계층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이은애, 2008; 심기오 외, 2010; 김윤희 외, 2012; 오금호 외, 2013).

- 일본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일본 ‘방재백서’(内閣府, 1987)를 비롯한 각종 문헌에서 나타나기 시작함. 방재백서는 재난약자를 “재난 시에 일련의 행동을 함에 핸디캡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Nemoto · Ariga, 2014: 3)하고 있음.
- 미국은 재해 대비·대응·복구에 있어 제공되는 기본 장비를 안전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을 재난약자로 정의하고, 주요대상으로는 육체적·정신적 장애인(시각·청각·인지·지체), 영어를 못하는 사람, 지리적·문화적 고립자, 의학적·화학적 의존자, 집이 없는 부랑자, 신체적 허약자 및 어린이 등을 제시하고 있음.
- 한국은 재난약자를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제약 등으로 각종 재난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관련 정보를 받지 못하는 기초 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쪽방촌 거주자 등(소방방재청, 2013)으로 정의하고, 그 주요 대상으로는 린이, 노약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외국인 등이 됨.

〈표 10〉 국가별 재난취약계층의 기준

국가	용어	정의	대상
미국	vulnerable people susceptible to attack [재난(취)약자]	재해 대비·대응·복구에 있어 제공되는 기본 장비를 안전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사람	육체적·정신적 장애인(시각·청각·인지·지체), 영어를 못하는 사람, 지리적·문화적 고립자, 의학적·화학적 의존자, 집이 없는 부랑자, 신체적 허약자 및 어린이 등
일본	재해약자 [災害弱者]	위험관리능력, 정보입수·발언능력 및 행동능력에 제한이 있는 자(일본 내각부, 1987)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유아, 임산부 등
한국	재난약자 재난취약자 재난취약계층 안전약자 안전취약계층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제약 등으로 각종 재난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관련 정보를 받지 못하는 기초 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쪽방촌 거주자 등(소방방재청, 2013)	어린이, 노약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외국인 등

나. 추진사업

□ 재난환경을 고려한 함께 누리는 맞춤형 안전복지 종합대책 마련

- 국민의식 향상에 따른 복지사회 구현 및 안전 수요증가와 고령화 사회진입 등에 따른 재난안전환경 개선 필요
- 재난취약계층이 작은 것 하나라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함께 누리는」 재난취약계층 안전복지종합대책 마련 필요
 - 재난취약계층이란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제약 등으로 각종 재난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관련 정보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쪽방촌 거주자 등을 말함

□ 재난취약시설로부터 재난약자 보호

- 삶의 여력이 없는 재난취약계층은 주거시설 노후와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이 부족하고, 특히, 달동네 등 거주민은 골목길의 협소 등으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 주거환경 열악 등으로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보급 등으로 화재피해 최소화 필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형 지원(생계비, 교육급여, 의료비 등 지원 및 주민세 감면, 전화료 면제 등)은 많으나 재난안전분야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 소방안전시설 미설치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 화재시 전체화재 대비 69.3%의 사망자 발생으로 주거시설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함
 - 12년 전체 화재건수 대비, 주거시설 화재발생률 24.7%에 비해 사망 69.3%, 부상 43.6%(2013, 소방방재청)

□ 주거시설의 화재 취약성

- 12년(주거/전체, 비율) : 화재 10,690건/4,324건(24.7%), 사망 179명/258명(69.3%), 부상자 857명/1,964명(43.6%)

자료: 소방방재청(2013: 33), 「더불어 상생」 재난취약계층 안전복지 종합대책.

- 또한, 최근 장마,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비탈면 붕괴와 침수 등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적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어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를 위한 절개지 주변 주택가 등 서민밀집 지역에 대한 재해위험요인 사전정비 필요

□ 수요자 눈높이 고품질 안전복지서비스 제공

- 풍수해, 화재, 대형사고 등 각종 재난 경험자는 우울증 등 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 받고 있는 실정임
- 생활여건 상 어려움이 많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속히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안정 상담 등 추진
- 태풍으로 재난피해를 입은 농민 자살, 대구 지하철참사 생존자 정신분열증세 등 사례 발생
- 또한, 내 마을 내 가정을 재난으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맞춤형 재난정보와 안전복지 컨설팅은 물론 피해발생 시 신속한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

□ 찾아가고, 찾아오는 재난안전교육 및 훈련문화 정착

- 생계유지, 거동불편, 정보약자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외국인 등은 재난안전 교육과 체험활동 참여가 부족하고, 특히 이들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의 어린이, 청소년들은 관심 부족 등으로 재난위험에 매우 노출되어 있는 실정
-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체험활동을 강화, 자기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연령별, 지역별로 ‘찾아가고, 찾아오는 이론·체험 교육’은 물론 각종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참고문헌

- 국민안전처. 2015.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5-2019)」.
- 김윤희·정소영·주요한. 2012. 재난 취약자 대상 재난안전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전략 수립. 국립방재연구원.
- 성기환·최일영. 2014. 안전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한국정부의 재난관리체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10(2): 327-354.
- 소방방재청. 2013. 작은 것 하나라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더불어 상생」재난취약계층 안전복지 종합대책.
- 심기오·박상현·정성희. 2010. 재난약자 방재대책 실태조사 및 분석. 국립방재교육연구원 방재연구소.
- 오금호·박소순·유병태·정소영. 2013. 안전약자 유형별 생활안전 콘텐츠 발굴.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이옥철·조갑출·하은호. 2015.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지도 개발.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 이은애. 2008. 재난발생시 재해약자지원시스템 구축 방향: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방재연구. 10(4): 32-39.
- 정지범·윤기웅. 2015. 「안전사각지대 발굴 및 효과적인 관리 방안 연구」. KIPA 연구보고서 2015-23.
- 충남도청. 2016. 「2015년 하반기 충청남도정주요통계」.
- 충남도청. 2016. 내부자료.
- 통계청. 2014.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2016 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개소기념 심포지움 자료집

발행일 : 2016년 9월 21일
발행인 : 안희정, 강현수
편집인 : 박근오
발행처 : 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32589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73-26
Tel) 041-840-1230
인쇄처 : 금강복사
28594 충북 청주시 흥덕구 충대로 15
Tel) 043-273-6244